

<정책 빠진 후보 보도>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돕는 후보 검증 보도 절실

98년 5월 13일 ~14일

경향,동아,조선,중앙,한국,한겨레
신문모니터분과

6·4 지자체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신문 보도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신문들은 후보들의 과거 공과 및 이력을 소개하는 데 머물고 있어 후보 관련 보도가 '검증'이 아니라 '인물 홍보자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출마 후보에 대한 보도는 객관적인 능력 평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뒷받침될 때, 유권자들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출마 후보들의 홍보에 그치는 신문들의 보도태도는 문제가 된다. 이같은 보도는 지금까지 선거보도 관행이 철저한 인물 평가, 정책 평가에 소홀했다는 측면과 함께 신문들이 지자체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중앙정치에만 매몰되어 온 신문들이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라는 관점을 놓친 채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 권역별 후보의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6·4지방선거 후보검증-쟁점>을

연재, 각 후보의 행적을 통해 후보 검증을 시도하고 있으나 후보들의 뚜렷한 정책 '쟁점'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공약 관련 기사는 마지막 5줄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전체 기사량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 13일자 조선일보의 <지방선거 여야후보 비교>도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보도하면서 정책 비교 대신 개인 '이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화려 변신...성공가도만을 달려온 엘리트의 첫 모험..." "손후보는 이후 축적했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듯 성장..." 등 흥미유발을 노린 표현들이 많다.

중앙일보도 13일자 4면에서 <"흰머리는 염색... 꼭 금주해라">, <허름한 식당서 식사 부인은 사투리 쓰고 물건값 깎지 말라> 등 '국민회의 선거지침'을 실어 흥미 유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14일자에서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배경, 선거전략, 정책비교 등을 통해 두 후보의 정책과제를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9개 분야로 세분해서 다루었다. 이 기사는 전날의 보도태도나 다른

신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책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엇보였다는 평가다.

한국일보는 지역감정 유발, 선정적인 제목달기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13일자 5면 <6·4선거 슬로건도 지역별 특화>에서 "바꿀 만하네 대구선 2번이 보여요"(국민회의), "무대점 강원도를 북방 거점으로 "(자민련), "국민의 정부 알고보니 호남 정부"(한나라)등 각 당의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슬로건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같은 날 6면 경기도지사 후보 검증보도 제목 역시 <뜨거운 양자구도>, <제2이인제 비유는 이미지 훼손 모략> 등 다분히 선정적이며, 기사내용 역시 "경기도의 표발은..." "현재의 판세는..." "각 후보진영은 이같은 표발 기류를 감안한 선거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등 후보진영의 동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15일자 <부산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등의 기사도 경마저널리즘의 한 사례로 지적받았다.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는다. 단순한 인물의 이력과 동정 보도만으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신문들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편파·왜곡보도>

정책·공약 검증은 뒷전...지역구도 설정과 편파보도로 일관

98년 5월 16일 ~ 22일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
신문모니터분과

지자체 후보등록이 끝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중앙일간지들의 선거보도량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도가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후보들의 선거운동 양상, 지역적인 사례들,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들, 지역구도에 입각한 여론조사 보도 등으로 채워져 지방선거 자체를 파행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지자체선거가 제2기 지방자치체 더욱 내실있게 다져내기 위한 선거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세력 다툼이어서 지역은 실종된 채 중앙의 싸움만 신문 지면에서 펼쳐지고 있다. 중앙 일간지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가 보여지지 않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 철저하게 편협하게 고착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언론이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협한 시각, 구태의연한 보도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도 결코 원만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남

아있는 기간만이라도 유권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감시와 공정보도를 기대해 본다.

1. 조선·중앙·한겨레의 서울시장 후보 지지 편파보도 심해

6·4 지자체 선거보도에서 조선, 중앙, 한겨레신문이 특정 후보 키워주기 등 편파적 보도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지적되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 기사에서 국민회의 고건 후보에 대해서는 불리한 기사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했고, 반면에 한나라당 최병렬 후보에 대해서는 자신있고, 소신있는 이미지로 보도하는 등 다른 신문들보다 편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먼저 양 후보 토론회를 다룬 기사 표제를 비교해 보면 고건 후보는 <직업공무원이기에 여러 정권에 봉사했을 뿐>(5월 19일 6

면)이라며 수세적으로 표현했으며 반면에 최병렬 후보는 <실업대책-교통-환경...서울시 통째로 바꿔야>(5월 20일 6면)라고 공세적으로 표현했다. 기사내용에 있어서도 고건 후보는 "그러나 92년 2월 서울시장을 물러난 뒤 민선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 87년 내무장관 시절 6·19대회는 일부 야당정치인과 좌경세력이 주축이 된 불법집회라고 규정한 발언 등의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 「정부 공식입장」 등으로 곤혹스럽게 해명했다"라고 하여 '곤혹스러운 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최병렬 후보는 "「서울개혁」을 주창했다. 최시장은 그의 성격대로 패널리스트들의 질문에 자신 있고 분명하게 답변했다. 특히 과거 공직시절 결정-집행했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여 자신 있고 소신 있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21일자 6면 서울시장 후보 TV토론과 관련한 기사 표제도 <최병렬 후보 찌르고 고건후보 막고>라고 하여 고건 후보에게 약점이 있고 이를 최병렬 후보가 공격한 것처럼 비취주고 있다. 기사내용에서도 "최 후보는...단호한 어투로 공세적 전략을 펼 반면, 고 후보는...부드럽고 방어적 전략으로 임했다", "고 후보는 자신과 차남의 병력 의혹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해명에 주력했다. 그러나 고 후보는...복무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대를 자원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했다"라고 하여 고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기에 급급, 편파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일보도 최병렬 후보에게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지적받았다. 5월 19일자 고 후보의 관훈토론회 기사에서 중앙은 <병역면제 아들 병명 밝히기 곤란>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정권을 두루 거친 그의 정치소신·병역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

랐다....아들의 병역문제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황 설명을 대신하며 병명에 대한 직답을 피했다"고 기술하였다. 반면 20일자 최병렬 후보 관훈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난제 해결 위해 조직 등 통째로 바꿔야>라는 제목으로 " '현재 서울시는 모든 것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한계상황에 와 있다....서울혁명을 수행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 후보는 후두염으로 목이 쉰 상태였지만 비교적 침착하고 조리있게 답변하는 여유를 보였다."고 기사화 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다.

한편 한겨레는 고건 후보에게 유리한 편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자에서 한겨레는 두 후보가 '거북이 마라톤' 행사에 참가한 사진을 실었는데 이 사진은 <서울·경기 여 우세속 경기는 격차 줄어>라는 여론조사 결과보도의 제목 바로 아래 배치되어 있어 여당 관련 사진으로 오해할 여지를 남겼다. 더욱이 고건 후보는 중앙에, 최병렬 후보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고건 후보가 눈에 띄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5월 19일자 5면에서 한겨레는 고건 후보의 관훈토론회 사진을 <'민심 속으로' 열전 16일 점화>라는 제목기사 바로 아래 실었는데, 기사와 사진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고건 후보의 얼굴 사진을 '민심 속으로' 라는 제목 아래 편집하여 관련성 있게 보여주었다. 이는 편집으로 고건 후보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반면 5월 20일자 최병렬 후보의 관훈토론회 내용은 6면 상자기사로 <'반년인 서울개혁' 소신평력>, <단국대 땅·KBS 경찰투입·산문체 질의 청문회 방불>이라고 표제를 달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사진도 고 후보의 토론 때와는 달리 작게 실어서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 지역구도에 가장 급급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5월 21일자 6면 후보등록 결과 보도에서 <기초단체장 수도권 출마자 여, 호남-충청 출신 많아>라는 제목을 달아 지역구도에 의존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사내용에서는 "95년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해당지역 출신들을 주로 공천했다면, 98년 신여권은 자신들의 텃밭인 호남·충청지역 후보들을 상당수 공천", "95년 민자당의 경우 일부지역에 영남출신을 공천했으나 대부분 수도권지역 출신들을 내세웠다"라고 하여 95년 민자당의 공천과 비교하고 있으나 민자당의 당시 공천에 대한 평가도 없이 단순비교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이 기사는 수도권 기초단체장 출마자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객관적인 분석기준도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같은 날 7면 <수도권 구여권 출신 '간판 바꾸기', 호남-충청 한나라 7명만 출전, 영남권 무소속 크게 줄어>라는 상자기사는 지역구도에 입각한 분석이 극에 달했다는 강한 비판이다. 이 기사는 또한 호남권에 후보를 내지 못한 것에 따른 신여권의 독주를 '1당 지배현상'이라고 규정하는 등 구여권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 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구여권...신여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호남, 충청 등 신여권의...1당 지배의 현상이 심화...영남권...한나라당의 분위기를 띠고...", "95년 민자당 간판을 달고 출마했던 후보들 중 상당수...국민회의나 자민련 간판으로 바뀌...", "한나라당의 호남권에 1명, 충청권에 6명 등 극소수의 후보...국민회의와 자민련의 1당 지배의 현상이 심화...", "영남권은...그러나 신여권의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져 당선 가능성은 타지역에 비해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같은 면 기초단체장 후보 등록 결과 분석 기사에서 <여야 '텃밭서' 세 과시 뚜렷>, <여, 호남-충청 제주지역 80~90% 출전, 한나라, 영

남-강원서 85~95% 나와>라고 제목을 달아 마찬가지로 지역성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일보는 21일 5면에서 <여야 '텃밭서' 무서워...>, <야 기초장 호남서 1명만 등록 국민회의 그나마 영남서 28명>라는 제목으로 기초장 정당별 후보등록 현황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다. 이 기사는 "각 주요 정당이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후보를 내면서 취약지역에서는 최대한 몸을 사렸다"라고 지역감정만을 갖고서 분석하고 있다. 그 밖의 신문들은 지역에 급급하지 않고 연령 학력 직업 재산 등의 다양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무난한 보도로 평가받았다.

3. 공약·정책에 초점 맞추는 기사 질실

동아일보는 21일자 17면 <고건-최병렬 서울시장후보 정책진단>이라는 머릿 기사를 통해 <고후보 '첨단산업 육성', 최 후보 '주행세 꼭 도입'>로 부제를 달아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서는 각 후보의 공약만을 단순하게 나열할 뿐 '정책진단'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일보 22일자 7면 <호색한...전과자...'흑색의 6·4'>라는 기사는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어떻게 흑색선전을 펼치면서 선거를 혼탁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표제가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4. 지역구도에 초점 맞춘 여론조사 판세 분석

조선일보는 5월 18일 6면 하단에 여론조사 항목과 관련, 총 12개의 질문내용을 싣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항이 투표 성향과 지역성을 연관 짓는 질문이며, 김 대통령의 정책에 관한 질문, 각 당의 경제위기 책임론과 지지정당 등에 관한 질문이다. 정책선거와 근접한 질문은 새 시도지사의 역할을 묻는 1번 항목뿐이다. 지자체 선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에서도 지자체 후보들과 관련된 공약이나 쟁점사항 등에 관한 질문에 힘을 실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여론을 지역성에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아일보는 16일 1면 <영남 광역단체장 한나라 4곳 선두>(부산-대구-울산-경북 여론조사)와 18일 <인천시장-충북지사 자민련후보 선두>(인천-충북 여론조사) 기사 역시 제목에서 드러난 대로 지역구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태도는 18일자 4면 하단의 <인천, 여 연대 영향력 다른 곳 보다 강해>라는 제목으로 "최후보는...인천지역 주민의 50%

이상이 호남 및 충청지역에 원적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기술한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상 종합해 보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전후하여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관련된 기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역성 부각이 지나쳐 지역감정을 가장 심하게 조장한 신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구여권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편향된 보도태도를 보였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신문들이 단순한 스케치 기사와 흥미위주의 기사를 싣는데 급급하여 유권자들의 판단, 국민들의 올바른 한 표 행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관심 조장하는 언론>

부정적 선거보도로 일관...유권자의 선거 무관심만 부추겨

98년 5월 20일 ~23일

경향,동아,조선,중앙,한국,한겨레
신문모니터분과

지자체 선거를 열흘 남짓 남겨놓고 언론은 선거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무관심하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역대 선거에 비교하여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언론은 그 원인으로 각 지역분할 구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선거운동, 쟁점이 없는 선거판, 경제한파 등을 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기 전에 언론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 언론은 스스로가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즉, 올바른 지방자치의 이 끌어내기 위하여 6·4 지방선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계도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각 지역별 쟁점들을 부각시켜 이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대결을 유도하지도 않고 있으며, 유권자에게 도움을 주는 후보자 정보 제공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각

정당의 정쟁을 확대재생산하고, 타락·혼탁 선거운동 사례 등만을 보도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정치혐오주의를 심고 있으며, 또한 나아가 지역분할 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지역관세보도, 무관심 조장 보도, 정쟁 위주의 흥미보도들은 이미 '단골 메뉴'로 정착되어 있으며, 여러 번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신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확대재생산하여 선거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일간지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문들은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제대로 소개하고 있지도 않으며, 당면 과제들을 쟁점화 하여 이에 대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사회의 공기(公器)라는 스스로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쟁점으로 떠

오른 몇몇 장관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관권선거 보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부추기는 보도, 지역별 관세분석 보도,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확인 소홀, 일방적인 추측보도만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과 최재욱 환경부장관이 불법 관권선거운동을 했다고 한나라당에서 발표하였으며, 이외에도 관권선거운동 사례를 신문들이 제각각 보도하였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한나라당의 불법관권선거발표를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는가 하면 혐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장관들까지도 싸잡아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6일자 6면 <열기 더하는 관권선거 시비>에서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 최재욱 환경부장관과 이해찬 교육부장관에 대한 한나라당의 불법선거운동 발표 내용을 사진과 함께 크게 싣고 있다. 또한 그 옆에는 <지방공무원 줄줄이 줄서기>라는 제목의 4단 기사를 실어 여당의 관권선거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사실 <장관들이 선거판엔 왜?>에서도 두 현직 장관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을 단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두 장관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중앙일보도 26일자 사실 <현직장관의 선거운동>에서 김·최 두 장관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운동 개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를 벌여 지위를 불문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강조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역시 사실에서 "오이밭에서 신발도 갈아신지 말라"는 논조다.

이렇게 신문들은 많게는 세 명, 적게는 두 명의 장관들의 불법 관권선거운동을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최장관의 경우 지역구에서 의례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나, 김장관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혀 두 사람의 행동

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사실 확인을 충실히 하고 더욱 신중하게 보도했어야 했다. 한겨레판 25일 23면에 <선거판 흐리는 장관님 김선길 해양, 충주시장 자민련후보 불법운동 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장관의 불법선거운동만을 문제삼아 비판의 선을 분명히 했다.

2. 유권자의 무관심 조장 보도

대부분의 일간지들이 기사에서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반면, 사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촉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2일에 <TV 선거 무관심...미디어 선거 무색>에 이어 23일자 1면 <지방선거 관심 실종>에서는 "6·4지방선거가...국제통화기금 경제난과 정치불신에 따른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극심한 이상한 기류 속에 치뤄지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무관심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 오히려 신문이 앞장서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같은 날 짜 4, 5면의 관련기사들이 대표적인데, 특히 5면의 <공약...비방...가서보니 실망땀>은 독자들 중에 뽑힌 명예기자들의 시각을 통해 냉소주의를 극대화했다는 빈축을 샀다.

그런데 23일 사실 <무관심 속의 혼탁지방선거>에서는 "지방선거가...과거캐기, 지역감정 촉발, 개인비방, 금품살포시비 등 혼탁 과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후 그 원인을 경제적 요인, 지역주의, 정치에 대한 실증 등으로 돌리고 있다. 또한 "이런 무관심 속에서 누군가가 뽑혔을 때 그가 진정한 지역사회의 대표로 일해줄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국민 각자는 조용하지만 각 후보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선거운동을 주시해야 한다"라며 독자들을 타이르고 훈계한다. 선거 무관심의 책임을 정치권과 유권자들에게 돌리고 자신들

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다. 비단 중앙일보 뿐만이 아니다. 경향신문도 23일 4면 <날 좀 보소 시선끝기 안간힘>, 25일 2면 <합동연설회 잇단 취소>, 26일 4면 <무심한 표발...속타는 여야> 등으로 선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에 각 신문 사실들은 이구동성으로 유권자들을 혼계하고 있다, <무관심이 풀뿌리 해친다> (경향신문 23일) <선거무관심에 대한 우려>(동아일보 25일자), <지방선거에 관심 기울여야>(한겨레 26일자), <유권자 무관심 선거 망친다>(한국일보 26일 사설) 등은 선거 무관심 현상을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결론에는 “그래도 선거에는 참여해야 한다”로 끝맺고 있다.

조선일보 역시 25일자 27면에 두 어린이가 양손을 올려 귀를 막는 사진을 내보내면서 “너무 시끄러워요. 지방선거 정당연설회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연설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다”라고 사진설명을 달았다. 선거운동 자체가 하나의 소음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같은 날 7면 <30대 투표자 가장 많아 수도권 최대 변수> 기사는 30대들이 강한 개혁성향을 가지고 있어 “舊與(구여)에 원초적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IMF로 실업늘어 현정권에도 비판적”이라고 쓰고 있다. 관련 사진은 30대 전후의 유권자들이 짜증스럽고 불신에 찬 표정으로 정당연설회를 듣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30대가 현 여당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서 제목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3. 지역분할구도 고착화시키는 판세분석

경향신문 25일자 2면 상자기사 <강원 부산 최대 접전>은 “경기혼전 역전 가능”, “혈전지역” 등 군사용어를 남용하면서, “호남=국민회의, 충청=자민련, 영남=한나라당의 등식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지역주의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같은 날 5면에서 부산지역 판세분석 보도 <YS 실정 대선 참패 흥이 안나요>도 지자체 선거를 지난 대선과 연계시키고 있다. 작은 제목에서도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시장이 된들 우리완 상관 없다-상인들”이라며 특정 상인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 26일자 강원지역 판세분석 보도도 <소지역주의 뚜렷 같은 값이면 고장 사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중앙일보에서도 25일자 4면에 <여강야약, 수도권선 큰 변화없어>라는 제목으로 “호남권(국민회의) 충청권(자민련) 영남권(한나라당)은 예상대로 지역연고에 의한 투표성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묶어서 ‘여강야약’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25일 3면에서 광역단체장선거 각 정당별 우세지역을 지도로 나타내 지역구조를 시각적으로 고착,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듯 지역별 판세분석 보도는 지역주의 고착이라는 문제 말고도 유권자들 사이에 허무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함께 드러냈다.

4. 한겨레 기획기사 돋보여

이 외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병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기사량이 정당후보에 비해 적다는 것과, 여당의 TV토론 거부 및 방송시간대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가 약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한겨레가 기획으로 마련한 <지역현안 후보에게 듣는다>는 위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 속에서도 지자체 선거의 본질을 일깨우게 하는 좋은 기사의 사례로 꼽혔다.

<‘네거티브’식 선거보도>

흑색선전 진위 파악은 뒷전...막연한 비판으로 정치혐오감만 부추겨

98년 5월 27일 ~ 29일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
신문모니터분과

선거가 중반전으로 치달으면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선거전의 한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인격모독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고 유권자를 이탈시킬 우려가 있다.

1. ‘네가티브식 선거’에 네가티브식 보도

더욱 문제인 것은 시비를 가리고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주체를 엄격히 가려야 할 언론이 사실보도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이를 확산, 유포시키고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선거분위기 전체를 혼탁으로 몰고감으로써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소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흑색선전을 비판하면서도 내용을 나열하는데 급급하여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조선 - <막가파식 비방전><선거판 혼탁 극심

><전현직 대통령에까지 ‘막말’><경쟁후보 사생활 흑색선전도> (28일자)

경향 - <더러운 언어폭력><지역감정자극, 막가파식 흑색선전><“지방선거전이 무지막지 해지고 있다”> (9일자)

동아 - <저질발언 - 흑색선전 갈데까지 갔다> (28일자)

한국 - <여“이에는 이”> <야 “사생활단”> (28일자)

특히 중앙일보는 29일자 <[지방선거 비방·흑색선전] 사례들>이라는 기사에서 ‘인신공격, 흑색선전’ ‘지역감정조장’ ‘저급한 표현’ 등 각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흑색선전 등에 대한 비판에는 이르지 못한 채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정치혐오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조선은 29일 7면에서 <손학규 후보가 폭로한 /필동 획서 문건 /호남 50년 집권실체는>

이라는 기사를 보면 "한나라당 측은 이를 뒷받침할 더 이상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필동계획서문건] [호남50년 집권계획설]이라는 소재목을 뽑아 이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9일 <선거와 말>이라는 사실에서는 흑색선전을 철저히 가려 엄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역시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겨레는 29일자 사실 <김홍신 의원 책임져야>에서 "한나라당은 '네가티브 캠페인'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상대약점캐기 전략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TV토론에 대한 문제제기 부족

선거전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TV토론이 후보들의 정략적 태도와 주최측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정책 및 인물검증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신문보도도 토론에서 드러난 공약에 대한 검증작업은 소홀한 채 주로 갈등을 부각하고 있어 정치협조를 불러올 우려가 제기되었다.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 경향 - <물고 물린 흠집내기'일관'> 28일 4면 <시종 가시돋친 설전> (27일 5면)
- 동아 - <TV토론 점입가경> (29일 5면)
- 한국 - <막가는 토론회 유권자가 기가막혀>

오늘의 이슈 선거풍토 대략

저질발언-흑색선전 갈데까지 갔다

"권력 제한 카탈레안" "제2의 나도 조세형" 후보비밀 국인 몰래서

"Y결 사임인제" 당선시키면 되겠나" 지역감정조장 극심

"출대홍문 입" "미심근 박이아" "출대홍문 입" "미심근 박이아"

출대홍문 입" "미심근 박이아" "출대홍문 입" "미심근 박이아"

정당과 "불법행위 선거비용도 끝까지 추적-홍문"

공정한 위원회의 구성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29일자 5면 <바람잘 날 없는 TV토론/정책대결하랬더니 혈투기에 지각까지/방송사 조종력 한계/공정성 보장장치 시급>에서 문제점 지적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한겨레는 또한 29일자 5면 <TV토론 관계자 불만 들어보면>에서 양당의 입장과 함께 KBS 토론자문위원 이효성교수의 입장을 함께 제시하여 객관적 판단을 도운 점은 바람직한 태도로 지적되었다.

3. 조선일보 편파보도 여전히 심각

한편 토론회 보도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편파적 태도가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었다. 조선은 28일 7면 <임후보 15분 지각 해프닝> <임후보 분장실서 버터 7분이나 편법방송>의 기사에서 멘트를 9개나 인용하며 늦게 입장한 임후보의 태도를 비난했다. 반면 여러차례 토론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 진행

(29일 5면)
조선 - <최병렬 후보 고건 후보 /얼굴붉히며 치열한 난타전> (27일 6면)
<임후보 15분 지각 해프닝> (28일 7면)

이들 기사에서는 과행적 진행에 대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도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중앙일보가 27일 <비방으로 치닫는 지방선거>라는 사실에서 "토론을 주관하는 측에서도 이러한 편파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가 질문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던 최후보의 독불장군적 태도에 대해서 조선은 27일 6면 <"KBS서 후보검증 질문 4개로 제한" / 최병렬 후보 진행에 이의제기/ KBS "선거법 따른 것">이라고 하여 최 후보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또한 28일 6면 <최병렬. 고건 후보 TV토론 사고여야 비난전 가열>이란 기사에서도 최 후보측의 주장은 12줄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기한 반면 고 후보측은 7줄로 다뤄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4. 유권자들에게 도움주는 기사

- 경향, 동아, 한겨레

한편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기사들도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병호 후보의 주장을 실은 경향신문 28일 4면 <나도 엄연한 후보/제발 기회를 달라/이병호 후보 TV토론 참여 촉구>와 동아일보 29일 5면 <외자 100억달러 유치공약>등은 타언론이 외면한 군소 후보의 주장을 게재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한겨레신문 27일 5면 <돈선거 시비 확 줄었다>나 <관련단체도 잠잠>과 동아일보 27일 사회면 <"수화유세 불허" 꼭 막힌 선관위 장애인 서럽다>등도 좋은 기사로 지적되었다. 제2기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정착하기 위해 언론은 시비를 가려주고 대안을 모색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풀뿌리정치 외면한 언론>

정계개편 향방에만 관심...지방선거의 중앙정치 도구화 조장

1998년 5월30일 ~ 6월 2일

경향,동아,조선,중앙,한국,한겨레
신문모니터분과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역분할구도에 따른 판세분석,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혼탁 양상 부각 등으로 언론이 유권자의 선거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선거 예상결과를 이후 정계개편과 연관시키면서 풀뿌리 민주정치를 표방하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선거를 사흘 남긴 6월 1일 이후 각 신문마다 모두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신문들은 더욱더 지방선거에 집중하여 유권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신문들은 유권자의 정치의식이나 지방자치 그 자체보다는 향후의 정계구도, 역학관계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결국 지방선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특정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편파보도도 여전히 나타나는 등 여전히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한겨레가 후보들의 공약, 정책을 게재하고 있고,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정부여당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 적절히 지적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 지방선거 결과가 정계개편 좌우?

-풀뿌리 민주정치 표방 무색

경향 6/1 5면 <정계개편 '표심향배따라'>
동아 6/1 5면 <선거바람후엔 '정가태풍' 분다>
중앙 6/2 1면 <신4당체제로 정계개편 추진>
5면 <정가빅뱅 "깨각깨각 초입기">
한겨레 6/2 5면 <여권 낙승맨 일단 '여대야소'로>

지금까지 각 신문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이나 총선과 마찬가지로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보도해 왔다. 특히 지방선거 예상결과를 중앙의 정계개편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는 위 기사들은 결과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지방선

거 본연의 가치를 외면한 채 이를 한낱 중앙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일부 신문의 경우 이러한 정계개편을 빌미로 편파보도를 통해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하려는 위험스런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겨레 기사의 경우 큰 제목에 '여권 낙승'을 상정하고 기사와 나란히 고건 국회의 서울시장 후보의 사진을 실고 있어 여권에 대한 대표적인 편파보도로 지적됐다. 경향 기사 역시 <선거승패로 본 3가지 시나리오>란 부제목을 달아 지방선거 결과가 차후 정계개편에 미칠 결과를 분석했다. 중앙의 경우 <與 수도권 강원 압승맨 메가톤급 과장/선거 후 경제 악화맨 시기 늦춰질 수도>라는 부제를 통해 지방선거 결과를 한 변수로 취급했고 동아는 <정계개편/與 비호남 선전맨 대규모 변동 불가피>라며 비슷한 논조를 폈다. 지방선거일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자칫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 자체보다 당이나 지역본위의 선택구도로 몰아감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네거티브'식 선거보도 여전

-대안 없는 공염불로 유권자 무관심만 부추겨

중앙 5/30 2면 <흑색선전·상호비방 265건> <지난대선의 10배>
3면 <'民意축제' 판개는 비방·흑색선전>
6/2 사회면 <6·4지방선거운동의 반성>
동아 5/30 4면 <시장 상인들 '선거 짜증'>
<"확성기 소음에 손님 다 달아나">
경향 6/2 6면 <막판 고질 '돈냄새' 다시 진동>
한겨레 5/20 4면<'돈뿌리기' 고질병 곳곳 꼬리잡혀>/<짜증나는 운동 "그만">

부정적 선거보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신문은 중앙일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30일자 <흑색선전·

상호비방 265건>기사에서는 선관위가 발표한 적발 건수를 놓고 대선이나 총선 때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혼탁함'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1만 여명이 넘는 후보자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단순 비교는 의도적인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3면에서는 전면을 활용 <비방·흑색선전 사례들>, <후보가 소중하면 黨선 대표/여야없이 풀불건 독설 경쟁> 등 비방·흑색선전에 관한 기사로 도배하다시피 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2일자 사설에서는 후보자들의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방식'이나 심각한 지역주의 풍토를 비판하면서도 "결국 유권자의 판단이 문제"라며 언론의 잘못된 보도태도에 대한 반성이나 그 어떤 대안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 또 동아일보, 한겨레 역시 선거운동원들의 '소음'에 대한 일부의 반발을 부각시켜 선거운동 자체를 부정적 시각으로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은 일부 신문의 부정적 시각으로 보도된 바 있다.

3. 동아·경향, 여권 '선심성공약' 비판 긍정적

동아 6/1 1면 <與 선심성 정책 남발>
경향 6/2 사설 <與의 준비안된 공약>

선거를 앞둔 여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을 지적한 동아와 경향의 기사는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선거보도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 신문은 각각 1면 머리와 사설을 통해 이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동아는 1면 머리기사에서 "주택경기 부양대책의 경우...여권의 당초 경제정책 기조와 달라 선거 때문에 앞당겨 정책을 시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여권의 선심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경향 역시 사설에서 "여당이 선거일을 앞두고 쏟아내는 정책공약은 새로운 관련선거 시비를 야기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 양상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을 만하다"며 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III

조선일보를 진단한다



왜 하필 조선일보인가?

왜 하필 조선일보냐고 묻는다. 간단하다. 조선일보는 영향력 만큼이나 문제도 가장 많은 신문이기 때문이다. 친일전력, 독재정권에 야합, 사상검증, 오보남발. 조선일보가 걸어온 길이다. 사실 조선일보 못지 않게 독재정권에 야합한 신문은 많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과 대한매일(구 서울신문)이 그렇다. 그러나 이들 신문과 조선일보의 현 모습은 매우 다르다. 대한매일은 비록 한계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했고 두 신문 모두 조선일보의 영향력에 비할 바 아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죄과도 많으면서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까지 1위를 차지하며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98년 7월부터 시작한 조선일보 기획모니터 작업은 한국현대사의 '오욕의 역사'를 짚는 눈물나는 과정이었다. 조선일보는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며 온갖모순의 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조선일보앞에 민중들은 '밥'과도 같았다. 언론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조선일보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연련 신문분과는 더 이상 조선일보의 문제를 다른 신문과 병렬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승복군 관련 기사 모니터>

이승복군 관련 조선일보 기사의 다섯 가지 문제점

모니터 대상 및 기간 : 조선, 중앙, 동아, 서울, 경향(68년 6월 10~12일
조선일보 98년 9월 28일자, 월간조선 10월호, 주간조선 15

조선일보의 이승복군 발언기사와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매체들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과 관련, 몇가지 정황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발언의 '사실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발언의 사실성여부를 밝히기보다는 “반공의식 고취”를 강조하며 “이념적 성향의 문제”로 사태를 몰고 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단초는 지난 68년 12월초로 마련되었다. 지난 68년 12월 초순, 무장공비가 외딴 마을에 침투했고 어린 초등학교생과 가족들이 공비에게 사살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그해 12월 11일자 3면에 실린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항거 입궐어> 제하의 기사를 내 보냈고 그 후 “공산당은 싫어요.”라는 말은 반공의식고취의 선봉적 구호로 쓰여져 왔다.

그러나 기자협회가 92년 가을호로 발행한 [저널리즘]이 “공산당은 싫어요.”관련 기사의 사실여부

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이승복군 발언 관련기사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후 이승복군 발언이 '공공연한 거짓말'이 되는 과정에는 공산당이 싫어요 관련 기사를 썼던 기자, 강인원씨의 여러 가지 발언이 특특히 한몫을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전언. 최근 언개련이 선정, 전시한 바 있는 『개혁을 위해 돌아본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과거들 50선』 중 이승복군 관련기사가 대표적인 오보로 부각되고 MBC PD 수첩이 9월 22일 『오보 그 진실을 밝힌다』를 방영한 후 조선일보가 발끈,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후 이승복 관련발언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승복군 발언관련기사의 진위를 문제삼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공비의 만행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반공논리를 문제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없는 사실을 만들면서까지 냉전적 시대상황에 편승, 대북 적대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언론사와 언론인의 정도냐”고 조선일보에 묻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언론의 생명은 사실보도에 있

다”고 전제하고 “냉전논리, 반공논리를 위해 무엇인가 조작할 수 있는 언론은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많은 것을 조작할 수 있다”고 꼬집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의 지나친 '이념경향의 대응'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 책임을 회피하려고 있다”고 일침을 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냉전논리 자체나 공비의 만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회 신문모니터팀에서는 “조선일보의 오보가 공산당이 싫어요 관련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언개련이 선정한 50개의 오보중 매가튼급 오보는 대부분 조선일보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문모니터 팀은 조선일보에 대해 “사실을 영똥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사실보도에 충실할 수 있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본회 신문모니터팀이 최근 조선일보의 이승복군 관련 기사들의 문제점을 뽑아본 것이다. 아무쪼록 신문모니터팀이 지적이 조선일보의 기사 방향 수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오보논란을 '공비만행 부정'으로 오판하는 제목 및 기사내용

<“이승복군 「공산당이 싫어요」 했다”/입 찢긴 아이 시체 확인">(9월28일자 1면)

<“엄연한 사실을 오보로 모는 이유 뭘가/공비들, 4살 막내도 패대기쳐 죽게">(9월28일자 2면)

<[이승복사건] '조작설 어디서 나왔나'- 92년 조작설 첫등장>

<「공산당이 싫어요」는 있었다>(월간조선 10월호)

<“30년전 기억 생생한데 '조작'이라니...">(주간조선 1523호/ 9월 30일 발행)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러나 최근 잇달아 [이승복 사건 조작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아심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다. (9월 28일자 2면)

한편 월간 조선 10월호 <「공산당이 싫어요」는 있었다>, 9월 28일자 조선일보 1,2,3,4면 기사와 관련, 인터뷰에 응했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진의가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들은 '녹취록이 있다', '상당히 솔직하지 못하다' '일단 잘못된 게 없다'는 말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뷰 당사자와 조선일보 기자 양측의 진술을 들어보면 조선일보의 기사가 왜 왜곡될 수밖에 없었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

1 당사자의 진의 살리지 못한 인용 → 왜곡보도의 시초

조선일보의 주장은 '인용된 부분 자체가 사실'이라는 단순 논리다. “있는 부분을 그대로 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들한테 판단이 필요없습니다”라는 조선일보 기자의 발언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을 할 때에는 맥락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인터뷰 내용을 전부 옮길 수 없어 어느 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전체 인터뷰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인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터뷰 당사자의 진의가 기사에 제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기사는 주로 당사자의 진의가 왜곡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부각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용부호까지 사용했지만 발언이 그대로 인용되었다기보다는 기자가 한 번 걸러낸 말이 인용되어 이 또한 왜곡인용이라는 지적이다. 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월간조선 10월호 <「공산당이 싫어요」는 있었다>(106쪽 하단)

“기사는 ①이승복군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전시한 ②「언론개혁시민연대」의 한 간사를 만나 전시에 내건 기사들의 선정기준을 물어보았다. 그는 「언노련 총서 제1권, 말지 8월호, 단행본 「언론개혁의 무기」(손석춘-개마고원) 등을 참조했다」며 ③「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행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말」誌를 창간한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지난 3월 27일자로 이름을 바꾼 단체이다”

위의 기사중 ①,②,③번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간사 중 누구도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적 없고 전화통화만 했으며 민언련이 행사를 지원했다는 발언은 한적이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가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났다고 한 것은 기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지어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③번의 경우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연개련 관계자는 「(이승복 보도가 오보라는 내용이) 말지에서 나왔었고 다른 자료도 많이 나왔었다」고 말했으며 「민언련이 지원했다」는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위의 기사가 「민언련은 말지를 창간한 민언련이 이름을 바꾼 단체이다」라고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말지와 민언련, 그리고 연개련이 같은 부류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민언련이 지원했다」고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는 주간조선 1523호(10월 8일~15일) 32, 33쪽의 “매체는 달라도 동일인들이 관여”라는 제목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주간조선 기사는 <‘이승복 오보론’주장 인물·단체의 관계>라는 도표까지 실고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지만 오보주장이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①번은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왜곡으로 비판받고 있다. 오보를 제기한 어느 매체나 단체도 ‘이승복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한 적이 없다. 더군다나 연개련이 전시회에서 이 기사 밑에 달았던 캡션에서도 ‘사건 조작’이라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음은 캡션 내용이다.

“나는 거짓 보도가 싫어요”: 한 신문이 “공비들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고 외치는 이승복군의 입을 찢어버렸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승복군은 반공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기사를 쓴 기사는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현장 생존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그것은 기사가 아니라 소설이었다.

2) 9월 28일자 조선일보

이날 기사는 많은 이들의 인터뷰 내용이 인용되었는데 이 또한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i) 「PD수첩」의 이용석 PD와의 인터뷰

“이 말(「공산당이 싫어요」)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들은 [PD수첩] 이용석(42) PD는 그러나 {학관씨의 말을 [주장]으로서만 인정할 뿐 1백% 믿을수 없다}고 말했다”

☞ ‘1백% 믿을 수 없다’는 말은 자칫 완전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석 PD에 의하면

그가 말한 진의는 ‘100%는 못믿겠다’ ‘전부 믿지는 않는다’는 부분 부정이었다고 한다. 당사자인 PD 역시 자신의 진의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기사의 말장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ii) 민언련 간사와의 인터뷰 내용

“[이승복 기사]를 단정적으로 오보라고 규정할 매체나 단체에 대해 역으로[지금도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말지 기고가인 민언련의 이유경(27) 간사는 {승복군이 공산당이 싫다고 말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마치 민언련 간사가 ‘오보가 아님을 인정’한 것처럼 교묘하게 연결해놓았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질문한 내용은 ‘기사의 진위여부’이고 민언련 간사가 말한 것은 이승복 발언의 진위여부이다.

뿐만 아니라 인용부호 속의 내용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민언련 간사에 의하면 ‘이승복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이미 증언으로 밝혀진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고 한다. 물론 조선일보식의 해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증언은 나왔지만 취재과정이 불투명해서 오보라고 본다’고 강조했던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등 발언의 앞 뒤가 잘린 채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여 ‘왜곡인용’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말지 기고가’라는 부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언련 간사가 공동집필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개인이 기고한 것으로 기사화한 것은 사실보도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로 지적받았다.

iii) 김종배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

가장 여러차례 인터뷰하고 많은 발언이 인용되었던 김종배 기자는 “조선일보 글을 보면 마치 저널리즘(1992년, 기자협회 발행)에 썼던 글이 잘못된 걸 시인한 것처럼 됐는데...앞 뒤 맥락을 잘라버리니까, 저의 발언이 180도 뒤집어진거죠”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김기자 자신이 저널리즘 기사에 대해 ‘불합격’판정을 내렸다는 것과 관련, “단어 그 자체는 나온 것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며 “진의와는 전혀 엉뚱하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2

확실한 취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

오보논란속에서도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강인원 기자가 이승복군의 형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강인원씨도 인정한 바다. PD수첩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자.

“만일 그 당시 주민 누구의 증언이라 하면 주민 이름까지를 신문에 박았을 텐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죽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 이름을 신문상에 명백히 밝히지는 않은거죠. 결과적으로 학원인지 학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 전해진 거라면 결국은 학관이 얘기한거기 때문에 그냥 학관이 한 것으로 인용을 해서 썼죠

위의 증언에 따르면 취재원은 역시 이웃사람들이다. 물론 이웃주민이 누구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68년 12월 11일자 기사는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더라’수준 내용을 토대로 작

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확한 취재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조선일보의 기사는 오보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인정'이 아니라 '오류를 확인'했다고 쓰고 있다. 9월 28일자에서 다른 반박내용은 1,2,3면에서 대량으로 다른 반면 '오류 확인'내용은 4면에 박스기사로 처리한 것도 몇몇하지 못한 태도로 비판받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확인한 오류는 어느 정도일까? 그것이 오보라고 단정하기에 곤란할 만큼 사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오보와 오류의 차이는 무엇인가

조선일보 9월 28일자 4면 [30년전 본보기사 '正과 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최근 『조작설』이 제기된 후 본지 취재팀의 확인 결과, 구체적인 보도내용에 있어서 본지를 포함한 각 신문들의 초기보도는, 각기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 우선 본지의 경우, 추후 밝혀진 사건 진상과 비교할 때, ①기사 도입부에 『승원군에 의하면...』이라고 표기,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취재한 것을 마치 승복군의 친형 학관(45)씨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표현했고, ②집에서 『승권』이라 불리던 학관씨의 이름을 『승원』이라 오기(誤記)했다. 이밖에도 『공비들은 부인 주여인의 이마에 기관단총을 들이대고 「밥을 지으라」고 위협했다』, 『2km 떨어진 향군초소에 이씨가 신고했다』, 『퇴비더미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장남 승원군을 구해냈다』는 등 사건진상과 다른 부분이 다소 있었다.

제 3자로부터 들은 말을 목격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표현한 것은 조선일보 기사의 잘못

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사작성 과정의 『실수』는 될지언정 『작문』의 증거는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조작설』의 근거는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기사작성 과정의 실수'라고 했다. 더군다나 민언련 신문모니터 분과의 모니터에 의하면 당시 조선일보 기사는 조선일보가 '오류'로 밝혀낸 부분을 포함,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매지인 월간조선이 후속 취재하여 밝혀낸 사실과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다.

2) 68년 12월 11일자 기사와 98년 10월호 월간조선의 사실 비교

- ① 기사 처음을 "장남 승원군에 의하면"이라고 취재원을 밝히며 시작
→ 기자들이 도착하기전 이미 원주의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기 때문에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학관씨를 만날 수 없었음.
- ② "저녁밥을 먹고 막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 승수와 승녀는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 학관, 승복은 모두 깨어 각자 일을 하고 있었음.
- ③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 인기척이 들려 학관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함.
- ④ "주여인의 이마에 기관단총을 들이대고 [밥을 지으라]고 위협했다. 주여인이 [쌀이없다]고 거절하자 [강냉이를 삶으라]고 재차 요구"
→ 신발을 신은 채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2명, 아랫방으로 3명이 들어옴. 그들 중 하나가 [이거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되겠소?]하니 어머니가 [촌에서 다 그렇지요 뭐]라고 함(가족들은 군인-국군-으로 알고 있었다고 함)

- ⑤ "어린이들은 3명의 공비에게 둘러싸여 감금됐고 주여인은 공비 2명의 총부리를 받으면서 강냉이를 삶았다"
→ 동생 들은 자고 있었고 승복은 책상앞에, 학관은 아랫방문 맞은 편에 앉아있었음. 어머니도 문밖에 나간 사실이 없음.
- ⑥ "주인 이씨는 아랫마을 채모씨집 이삿짐을 날라주느라고 집을 비우고 없었다."
→ 채모씨가 아니라 강환기씨.
- ⑦ "강냉이를 먹은 공비들은 ... 가족 5명을 안방에 몰아넣은 다음 복괴의 선전을 했다."
→ 모두 허구
- ⑧ "승복어린이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얼굴을 찡그리자 그중 1명이 승복군을 끌고 밖으로 나갔으며 계속해서 주여인을 비롯한 나머지 세자녀를 모두 끌고 나가 10여m 떨어진 퇴비더미까지 갔다."
→ 얼굴을 찡그렸다는 증언 없음. 학관이만 퇴비장으로 던져짐. 나중에 승복이를 비롯한 나머지 가족은 방안에서 죽은 것으로 밝혀짐.
- ⑨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벽돌만한 돌맹이로 어머니 주여인의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쳐 현장에서 숨지게 했으며 승복어린이에게는 [입버릇을 고쳐주겠다]면서 양손가락을 입속에 넣어 찢은다음 돌로 내리쳐 죽였다. 나머지 세어린이도 돌로 짓이겨 죽인다음 퇴비더미를 덮었는데 장남 승원군은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 않아 살아났다."
→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자 공비가 승복군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올렸고 다른 공비가 칼을 입속으로 박았으며 학관군이 공비들을 밀치자 칼부림을 하는 등 만행.
- ⑩ "주인 이씨가 아랫마을에서 올라왔을 때 공비 2명이 토방에 걸터앉아 있었고 다른 3명은 집안을 온통 뒤지...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 1명은 총을 겨누고 1명은 이씨를 쓰러뜨린 후 배 위에 올라앉아 칼을 뽑으려 했다."
→ 이씨가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사내들이 어둠속에서 나타나 [아, 이제 오시오? 방에 들어갑시다]라고 하여 방으로 감. 문을 열자 피비린내가 진동. 이후 공비들과 격투(?) 끝에 부엌을 통과해 도망침. 이과정에서 공비가 총을 겨누거나 칼을 뽑은 바 없음.
 - ⑪ "이씨는 방문을 내딛는 순간 공비의 칼에 엉덩이를 찔렸다. 2km떨어진 향군초소에 이씨가 신고, 군경예비군합동수색대는 이씨를 앞세우고 현장에 도착했다."
→ 부엌을 뛰쳐나와 돌담을 넘을 때 칼에 오른쪽 대퇴부를 찔렸음. 도망친 이씨는 강환기씨 집으로 가 [간첩한테 맞았다]는 등의 얘기를 했고 함께 있던 유경상씨가 신고하기 위해 나감. (가장 가까운 용전리 지서는 18km 떨어져 있음.)
유경상씨는 신고하러 가던 중 친구 김기운씨를 만나 이야기를 전함. 김씨가 트럭을 몰고 지서로 가 신고. 군인,경찰,예비군들이 왔으나 무서워 현장에는 못가고 있던 중 공수부대가 와서 부상당한 학관을 돌봐줬던 친척아주머니 최순옥씨를 앞세워 현장에 감.
 - ⑫ "퇴비더미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숨이 끊기지 않은 장남 승원군을 구해냈으며"
→ 이미 학관은 혼자서 근처 집에 가서 도움을 청했으나 학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 짐을 챙겨 떠나기에 바빴음. 세집을 거쳐 겨우 최순옥씨집에 도착했고 여기서 처음 승복군의 얘기를 했다고 함. 이후 마을로 옮겨 졌다가 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됨.
- 위의 사실비교는 68년 당시 조선일보 기사의 기술 순서대로 비교한 것이다. 대부분의 기사내용을 사실과 다르다. 이처럼 기사작성의 원칙이 무엇인

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이 작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4가지 사실만 틀렸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몇몇하지 못한 태도로 비판받고 있다.

3) 제한적인 취재원과 신빙성 부족한 진술 - 타사기자의 발언 증언 무시 -

조선일보가 사실 보도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형이학관씨를 비롯한 주민들의 인터뷰와 당시 기사를 썼던 강인원 기자의 증언이다. 조선일보는 기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점과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는 형의 증언을 토대로 오보에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현장에 있었다=오보가 아니다]/"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은 진짜다=오보가 아니다라는 등식은 논리적 비약이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기자를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당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들었다. 는 이웃주민들조차 기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어떤 경로를 통해 조선일보 기사가 작성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조선일보는 당사자인 강인원씨조차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다. 다만 9월 28일자 <[이승복사건] '조작설 어디서 나왔다'- 92년 조작설 첫등장>에 의하면 "당시 조선일보 취재기자인 강인원(58)씨도 (현장에 도착해서 시체 주변에 있던 주민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썼다)고 말했다"고 썼을 뿐이다.

3

아직도 남은 의문점

특종보도한 조선일보, 왜 후속 보도가 없었나?

조선일보는 12일 "만행의 현장"이라는 작은 사

진을 사회면에 게재했을 뿐 관련기사나 사설을 전혀 실지 않았다. 이는 다른 4개 신문이 자사 기사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음에도 조선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복귀의 만행을 규탄하는 사실을 썼던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의아하다.

당시 조선일보만 조간이고 경향,서울,중앙,동아 가 모두 석간신문이었다. 이들 석간은 10일자로 이 사건을 모두 보도했는데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학관씨가 병원으로 후송된 뒤 도착한 기자들은 당시 사건현장과 경찰의 브리핑을 토대로해서 추측과 짐작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모든 신문기사가 사실보다는 허구가 많다.

그러나 공통점은 10일자 기사에서 승복군 관련 보도가 없다는 점이다. 11일 조선의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항거 입궐어]기사로 인해 데스크로부터 채취계를 지시받아 11일자 석간은 일제히 상보(후속)기사를 내보냈는데 <"공산당엔 안속는다"에 입궐어>라고 보도한 서울신문을 제외하고는 승복군 관련기사는 없다.

지난 9월 28일자 기자협회보에 의하면 당시 후속취재를 했던 경향신문의 강한필 기자는 조선일보 보도이후 주민 30여명에게 취재했으나 '공산당이 싫어요'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9월 30일 발행된 미디어오늘에 의하면 당시 취재기자들의 익명인터뷰(조선과 경향을 제외한 신문들은 임시 취재반등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기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기사를 쓴 조선일보의 강인원 기자는 지난 최근 발행된 조선일보 사보와의 인터뷰에서 "타사 기자들은 [이미 상황은 끝났고 현장을 둘러보기만 하면 된다]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취재했기 때문에 승복이를 죽임으로 내몬 이유를 묻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타신문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

들이 부실하게 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라며 타지 기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

4

타지 기자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

[조선일보사보]에서 강인원씨는 "일부에서는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던데요"라는 질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타사기자들이 쓴 기사에는 현장의 생생

한 얘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신 위를 덮고 있던 옥수수다발 얘기도 없고 시신에 대한 설명도 없는 걸 보면 현장 취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68년 당시 조선일보 보다 하루 먼저 이 사건을 보도했던 서울신문은 12월 10일자 7면에서 "... 3명을 퇴비장에 끌고나와 돌로 때려 참살, 옥수수단으로 숨겨놓고 옥수수가루 3말, 고추장 6사발, 닭3마리를 흠쳐 달아났다"고 보도하였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역시 10일자에서 '옥수수단'을 언급한 바 있다.

오히려 조선일보에서는 ①옥수수더미가 12일자 사진 설명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또한 ②살해 도구로 돌만 언급한 점, ③방을 들여다보기만 했으면 알았을 만행의 장소를 방안이 아닌 마당이라고 보도한 점 등은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강씨의 현재 발언과 조선일보의 보도는 특종이라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의구심을 갖게 한다.

5

기사작성의 원칙과 기자윤리는 어디 갔는가

월간조선에 <반공소년 이승복을 두 번 죽인 오보론의 허구 '입증'> 기사를 쓴 이동욱기자는 조선일보사보에서 "북한관련보도로 오보시비를 거는 진짜 이유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성언론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약점을 갖고 있음을 기회로 북한의 관영언론을 그대로 유포하려는 [좌익친북한 상업주의 언론]들의 작태라고밖에 분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28일자 2면 기자수첩을 통해 진성호 기자는 "이 문제를 「조선일보 오보 논란」을 통해 집요하게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양민학살이란 사건 성격까지 희석시키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 90%이상이 작문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이데올로기공세로 몰고 가려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승복 군 기사 오보론을 제기한 어느 매체나 단체도 당시의 공비들의 잔악상을 부정한 적이 없다. 더군다나 '북한의 관영언론을 그대로 유포하려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의 작문성 기사는 안보에는 도움이 되었을 지 몰라도 기사의 원칙과 기자윤리에는 어긋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안보'와 같은 대의를 위해 사실보도라는 기사의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면 취재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보도라는 원칙이 무시된 작문성 기사는 그 목적과 결과가 아무리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되살아난 메카시즘 망령>

-사실 왜곡 남발, 사상공세 펴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한 방종일 뿐 -

1998년 10월21일~11'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남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 너무 바쁘게 보내왔다. 이제는 스스로에 대한 검증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다

1. 조선일보 보도 검증받아야 마땅

최장집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월간조선, 주간조선 포함)의 보도를 두고 각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시위를 하는 등 각계 각층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시에 '밝고힘찬나라운동' 등 이름이 생소한 보수우익단체들의 최교수 비난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최장집 교수는 월간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포금지 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 논란을 야기한 장본인인 조선일보는 10월 21일 이후 거의 매일 관련기사를 싣고 있는데 이들 후속기사는 이 논란을 사상논쟁으로 몰고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10월 24일 4면의 경우, 이례적으로 광고도 싣지 않고 전면에 기사화하는 등 구시대적 사상논쟁에 지면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

판도 제기되었다. 불과 얼마전 이승복 군 보도에 이어 또 다시 '지면 사유화'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일보의 후속보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초기에는 조선일보의 직접적인 반박기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여론전'에 밀린 점을 인식한 듯 최근에는 독자투고와 외부필자의 칼럼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조선일보로서는 이러한 편집으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일 이들의 글이 비판받는다 해도 그 비판에서 한층 자유로울 수 있으며 동시에 독자투고에 대한 비판은 자칫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언제든지 이를 역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조선일보가 목소리 높여 외치는 언론의 자유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책임을 수반한 언론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는 한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글에 대한 비판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더 나아가 본회 신



문분과 역시 조선일보 독자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2. 조선일보의 왜곡된 주장 반복하는 외부필자 칼럼과 독자투고

이들 기사의 공통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조선일보가 최교수 논문을 상당부분 왜곡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월간조선이 대표적으로 왜곡한 '6.25 전쟁은 민족해방전쟁'과 '역사적 결단' 부분은 거의 모든 독자투고에서 최교수 비판과 조선일보 옹호의 근거로 등장하고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 역시 '공인의 사상검증은 언론의 자유'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공인의 사상을 검증할 자유'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주장이다. 둘째, 학

자로서 작성한 논문의 맥락을 살리지 않은 채 특정 단어만 부각, 왜곡인용한 것은 사상검증이 아니라 언론의 폭력이다. 셋째, 어느 누구도 조선일보와 같이 편향된 이념을 갖고 있는 신문이 사상검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그것이 언론자유라고 주장할 지 모르나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 현재 조선일보의 '언론의 자유'는 소모적 논쟁과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넷째, 공인의 사상검증이 언론의 자유라는 조선일보식의 논리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조선일보는 10월 26일자 사설 <최장집 건국사관 규명해야>에서 최교수의 사상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 "그가 대학 연구자로만 남아 있는 한에는 월간조선이 그토록 정면의 논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리라고 본다. 그는 다음아닌 대통령 정책기획 위원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저서에 드러난 6·25관 등, [최장집적 현대사보기]가 공적으로 논란되기에 이른 것이다"라며 공인의 사상검증이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즉 최교수가 학자로만 남아있다면 그의 논문은 문제삼을 수 없고 공인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문제삼는 논문은 바로 최교수가 학자로만 있을 당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식대로라면 연구자일 당시 그가 쓴 논문을 어느날 그가 공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치기라도 해야 된다는 말인지 되물지 않을 수 없다. 최교수는 학자로서 논문을 썼을 뿐이고 그런 그가 공직에 임명됐을 뿐이다.

만일 조선일보가 최교수의 사상이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그를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무게가 실리는 게 논리적으로는 오히려 타당하다. 그러나 월간조선 11월호에는 "북한의 남침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했던 공산세력의 움직임을 민중항쟁으로 보는 그의 시각은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관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하여 최교수와 김대통령을 차별화했다. 따라서 조선일보

가 주장하는 공인 사상검증의 자유는 결국 '진보 인사 죽이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조선일보의 후속기사에서 언론자유를 옹호한 대표적인 글은 11월 9일자에 실린 <언론사 이념표현은 자유>라는 제목의 한 주부 독자가 쓴 글과 외대 신방과 정진석 교수가 쓴 <공인검증 가로막는 것은 언론자유 억압하는 행위>라는 칼럼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언론의 자유가 '사실로부터 자유'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조선일보의 보도가 학자의 글을 비판해서 문제가 아니라 논문을 상당히 왜곡, 사실에 기반해야 할 언론보도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이들은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논문에 대한 비판을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며 언론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탄압이고 폭력이다"라는 정교수의 주장은 논문에 대한 비판이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세부적 견해가 무시된 주장이다. 더군다나 최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과거 사상검증을 이유로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을 일삼아왔던 행태를 답습한 것이라는 점을 언론 학자인 정교수가 정말 모르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언론사 이념 표현은 자유>라고 했던 주부 독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우리와 비교도 안될 만큼 보장되고 언론의 정치적 입장 표명이 거의 공식화된 미국언론을 우리의 현실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1월 5일자 연세대 송복 교수가 쓴 칼럼은 '공인은 검증돼야 한다는 제목만 보면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렵다. 공인검증에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송 교수는 "그 소임을 특정 언론이 했다면 그 언론의 검증이 정확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시비는 있어서도 그 검증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성토나 규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송교수의 말대로 최장집 교수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논란은 바로 검증이 정확했는가에 대한 시비가 핵심이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은 최교수의 반박과 여러 매체와 단체의 주장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송교수는 이어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리게 했다는 구절은 누가 읽어도 일단은 눈을 한 번 멈추게 하고 생각을 한번 가다듬게 하는 구절이다"라며 "물론 글 전체로 봐서는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역사적 결단'에 대한 조선일보의 주장이 논문의 맥락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과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말에 『역사적 결단』이라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 뜻이 함의된 말이다. ... 김일성의 전면전 결정에도 이 용어를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인다.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쉬운 점은 송교수의 주장대로 최장집 교수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지적받아야 한다면 동시에 '글 전체로 봐서 문제삼지 않아도 되는' 것을

社 説

『최장집 建國史觀』 규명해야

이념의 유물론적 사관(物論)은 조선 건국 이래로 계속된 민족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군과 실정대 이후의 남북 유물론은 있으며 북쪽은 민족통일 노력이 그 남북의 단절과 분리를 정당화하고 규정한다. 그 결과 유물론 사관의 선례가 없었고 '조선 건국' '민족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건은 사실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유물론적 사관(物論)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 사건(事件)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당성(正當性)을 인정하는 것은 유물론적 사관(物論)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적 생존권 차원에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현안까지 고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유물론적 사관(物論)은 유물론적 사관(物論)의 유물론적 사관(物論)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군과 실정대 이후의 남북 유물론은 있으며 북쪽은 민족통일 노력이 그 남북의 단절과 분리를 정당화하고 규정한다. 그 결과 유물론 사관의 선례가 없었고 '조선 건국' '민족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건은 사실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유물론적 사관(物論)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 사건(事件)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당성(正當性)을 인정하는 것은 유물론적 사관(物論)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적 생존권 차원에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현안까지 고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유물론적 사관(物論)은 유물론적 사관(物論)의 유물론적 사관(物論)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군과 실정대 이후의 남북 유물론은 있으며 북쪽은 민족통일 노력이 그 남북의 단절과 분리를 정당화하고 규정한다. 그 결과 유물론 사관의 선례가 없었고 '조선 건국' '민족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건은 사실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유물론적 사관(物論)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 사건(事件)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당성(正當性)을 인정하는 것은 유물론적 사관(物論)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적 생존권 차원에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현안까지 고찰할 수 없다.



문이 전면에서 내세워 비판하는 조선일보의 보도 역시 비판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송복 교수의 글에서는 최장집 교수의 논문이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좌파주장이라는 결론은 없다. 그래서인지 조선일보는 송복 교수의 글 아래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송교수의 칼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외부필자 칼럼에 대해 위와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 독자투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저술가 박정국씨의 글이다. 이 저술가는 11월 4일자 <'진보적 지식인' 생태 한심>이라는 글에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진보적 지식인뿐 아니라 보수주의자들도 누려야 하는 귀중한 자유다"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최장집 교수는 물론 그를 옹호하거나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이들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눈에 띄는 것은 조선일보가 그의 글을 10월 28일에도 실은 바 있으며 11월 4일에는 박스까지 동원하는 등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독자투고마저도 '사유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3. 한겨레 신문 트집잡기, 위기의식의 발로인가?

조선일보 11월 5일자 [미디어 다시보기]에서 진성호 기자는 <한쪽 눈만 뜨고 보는 「한겨레 신문」 / 최장집 위원장 파문 편향 보도 일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는 과거와 달리 조선일보의 의제설정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입장에서 보도하는 신문 방송 등을 비판한 글이다.

특히 한겨레 신문이 11월 4일 "언론개혁통신연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국민승리 21 등 단체가 최 위원장 문제로 조선일보를 비판했다고 집중소속했다"면서 그러나 '자유지성 300인회'의 성명내용을 실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그러나 한겨레는 다음날인 11월 5일 자유지성 300인회

의 성명내용을 기사화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일보가 한겨레를 비판한 바로 이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루 늦게 보도했다고 게 편향보도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가. 이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조선일보의 편향보도 사례는 나열할 수조차 없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보도에는 인색한 반면 관련단체의 입장은 거의 대부분 기사화하였다. 바로 이번 논란만 하더라도 조선일보는 10월중 민주연론운동시민연합(10/27일, 11/6일 발표), 민예총(10/30일 발표)의 성명서 내용은 기사화하지 않았다.

이 기사에서 진성호 기자는 한겨레 비판에 이어 "한 중앙일간지도 ..."라며 국정감사 중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발언보도에 조선일보에게 유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같은 날 국민일보는 ..."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중간에 언급한 '한 중앙일간지'는 중앙일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독 중앙일보만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디어 다시보기] 기사는 트집잡기에 급급한 '이상한 기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남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 너무 바쁘게 보내왔다. 이제는 스스로에 대한 검증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만일 조선일보가 자기 검증을 게을리한다면 타자로부터의 검증은 불가피하다. 다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식의 비판을 서슴지 않는 오만한 조선일보에 대해 이제 민주시민들이 나서야 할 것 같다.

<조선일보 최장집 보도 논란>

사실왜곡에 기반한 사상검증이 언론자유?...타 언론의 질타 이어져

1998년 11월9일~11월

경향, 대한매일, 동아, 문화,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최장집 교수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월 11일 판매배포금지 가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사 보도의 문제점을 조금도 인정치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의 판결내용조차 왜곡해석하여 조선일보에게 불리한 내용은 최대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법원 판결 왜곡하는 조선일보

12일자 해설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월간조선의 기사 중 재판부가 문제없다며 기각한 부분들은 최위원장의 6·25 전쟁관을 가늠하는 중요한 것대들 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최위원장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는 최소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거나 나아가 월간조선의 문제제기를 대체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조선일보가 자사 보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조

선일보는 또 "재판부가 최위원장측의 이의제기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기사 작성과 관련해 인용의 정확성과 전체 맥락에 대한 흐름 파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충격적'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했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흡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좌경사상을 신봉한다는 사실적 주장과 '좌파적, 친북적' 표현만으로도 인격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 이후 조선일보는 유독 '언론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13일자 사실 <언론자유 문제>에서 조선일보는 "공직자 검증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추가보도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제 [최장집 대 조선일보]의 차원을 넘어 언론 자유 본질의 문제로 전환됐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언론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는 전제가 있을 때뿐이다. 원문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가 아닌 감정에 의거해 자극적으로 선동하는 태도는 언론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면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하루도 빠짐없이 몇주째 이문제를 기사화하고 있다. 특히 여론에 밀린 점을 의식해서인지 국내외 지식인들의 글을 시론이나 해외기고라는 형식으로 실고 있다. 이러한 외부기고의 내용은 논지에 설득력이 떨어져 조선일보가 여론에서 밀리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칼럼 대부분이 '민족해방전쟁'이나 '역사적 결단' 같은 용어를 문제삼는 등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례로 17일자 피터 현의 글에서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정권인 북한에 더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좌파가 있다니 전을 할 따름"이라 등 감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12일자 만물상에서는 72년 독일의 좌파학생 지도자가 체제 속에 들어가 체제를 바꾸자고 주장했고 그들이 공직, 특히 학교를 선호했던 것에 대해 독일 정치인들이 위기를 느껴 공직 취임을 막았던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최고수를 겨냥한 내용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월간조선 12월호에서 그람시의 '진지전' 운운하며 최고수를 공격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자료로 삼은 [한국전쟁연구](90년 태암출판사)는 이미 절판되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이다. 연구와 고민의 결과로 나온 수정본은 무시한 채 굳이 절판된 책을 문제삼는 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인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검증이 '사상검증'일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상검증을 빌미로 한 사람의 사상을 옹고그림의 잣대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 사실왜곡에 바탕을 둔 조선일보의 사상검증은 기사로서의 가치도, 검증의 공정한 기준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2. 일부 신문, 조선일보의 사상검증 비판

한편 조선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도 이 사안에 대해 나름대로 기사화했다. 특히 세계일보의 경우 조선일보의 무리한 의제설정, 시종일관 동조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세계일보는 10월22일 <좌파사관 논란>으로 시작, 11월3일 <이념혼란을 경계한다> 10일 <제이피가 입을 연까닭> 등의 사실을 내보냈다. 또 특별기고 형식으로 한 지면의 절반이 훨씬 넘는 분량으로 <이념적 혼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건국이념 재천명 국민통합의 큰 정치 펼쳐야>, <반한사관의 만연을 우려한다-정체모호한 진보세력 바로 알고 대처해야> 등을 연이어 게재했다. 김총리가 국회대정부질문-답변에서 최고수의 사상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14일자 1면에서 머리기사로 실으며 "이념기류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일보 역시 초기에는 최고수의 시각을 논박했다. 이 신문은 22일자 사실 <최장집 교수에게 묻는다>에서 "우리가 보기엔 '월간조선'에서 제기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며 "최고수의 시각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정부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강변하였다. 이후 문화일보는 약간의 태도변화를 보였다. 11월9일자에는 <최장집교수 논문 지상중계>라는 타이틀로 양측의 주장을 나란히 소개했다. 11월 16일 역시 '포럼'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위아래 편집으로 실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경향신문의 경우 별다른 논평없이 스트레이트성 기사로 간간히 보도를 하

고 있다. 법원의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측의 공세도 크게 보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권과 조선일보와 여론의 눈치보기 보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이와달리 한겨레신문과 대한매일(구 서울신문), 중앙일보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실과 칼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에 대한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광신적 폭력이며 부당한 이념공세로 규정짓고 개혁이 좌절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벌이 소유한 중앙일보의 경우 보수적 색채가 강함에도 이번 사안에서는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을 직설적으로 해 주목받고 있다.

중앙은 10월 23일자 <생사람 잡는 지식 풍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직도 언론이 앞장서 레드 콤플렉스 바람을 불어제치면서 선동하고 정치인들이 멋모르고 맞장구를 치는 이런 한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학문의 자유와 정치의 민주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쓰고 있다. 또 11월 9일자에는 논쟁의 당사자인 최장집 교수의 {한국서 바라 본 제 3의 길}이라는 칼럼을 실어 간접적으로 최교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의 이런 보도 태도는 대북경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아이엠에프 체

제하에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 개발은 기업 입장에서는 간절한 것이다.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필수적인데 여전히 냉전의 틀에서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조선의 태도는 생존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것이다. 이는 보수세력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생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을 것임을 예측케 한다.

이 사안은 공인에 대한 사상 검증과 개인의 명예 훼손, 언론의 자유와 학문 사상의 자유 등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였다. 나아가 현대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로 깊이 있는 논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양상은 감정적인 차원의 세대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이는 최고 수 비판의 근거지인 조선일보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무시한 자구에만 집착하여 감정적인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언론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왜곡기사 남발이라는 악습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집중분석>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 곡필과 오보 10선

“공산당이 싫어요”는 조선일보의 작문

'반공'을 국시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독재 정권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했고 보수 언론 역시 국가안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마녀사냥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일보야말로 그런 언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특히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는 “북한 관련 보도는 오보를 해도 괜찮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마치 이 나라의 사상검증을 책임진 '전사' 처럼 수없이 현상을 왜곡, 과장해 왔다. 이러한 태도는 '체제도 수호하고 신문도 팔자'는 발상으로 여겨진다.

1. 이승복 어린이 사건 관련 보도
(68년 12월 11일자)

“공산당이 싫어요”는
조선일보 기자의 작문이었다

68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 3면에 실린 <“共産

黨(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抗拒(항거) 입 찢어>라는 제목의 기사는 '안보상업주의 원조' 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장남 승원군에 의하면”이라고 취재원을 밝힌 뒤 “열 살 난 2남 승복 어린이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얼굴을 찡그리자……”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보도는 오보임이 밝혀졌다. 이 보도가 나간 뒤 당시 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의 조간신문들은 사실을 통해 공비의 만행을 맹렬히 비난, '이승복 신화' 만들기를 거들었다. 그러나 정작 이 신문들의 자체 취재기사에는 승복군의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외마디나 항거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신문들이 이 보도를 인용했는데도 특종보도한 조선일보가 후속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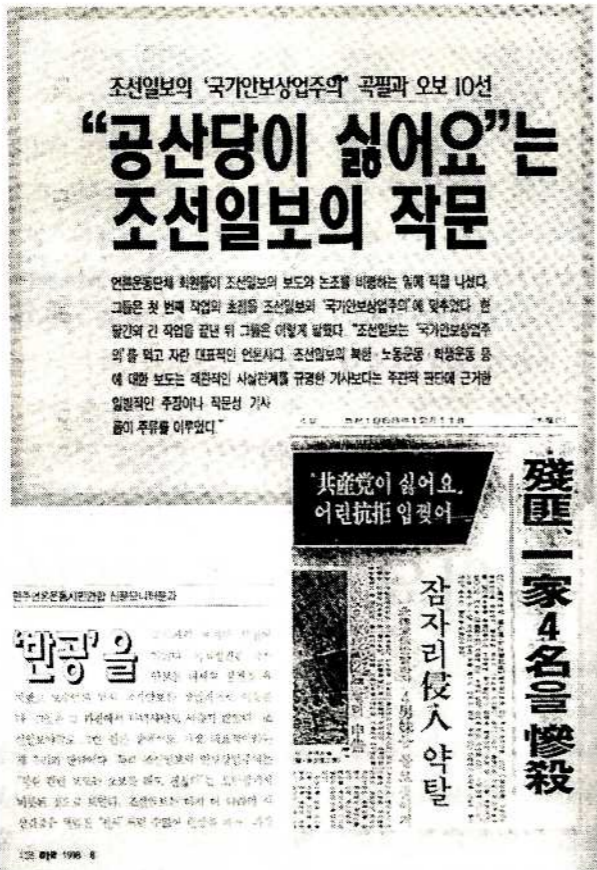
이 보도가 오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당시 취재원으로 밝혔던 장남 학관군(당시에는 승권으로 불렸다)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기자협회가 발간한 <저널리즘> 1992년 가을호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는 승복

군의 형으로서,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학관씨로부터 얘기를 듣고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학관씨는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 기사에서 장남의 이름을 ‘승원’으로 오기한 것도 이 보도가 기자의 작문이었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다. 물론 조선일보는 반공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작문을 하면 좀 어떠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발상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글을 쓰는 것은 소설가의 몫이지 언론인의 몫은 아니다.

2. 금강산댐 평화의 댐 관련 보도 (86년 10월 31일자)

집단적 광신주의 부추기는 세계적 웃음거리 제공

86년 10월 30일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석간신문을 통해 처음 보도된 ‘금강산댐’ 관련 보도는 정부의 정보조작과 이에 적극 호응한 언론이 만들어 낸 대형오보로 유명하다. 조선일보는 10월 31일이 건을 처음 보도했는데 ‘조국통일을 뇌까리는’, ‘악마의 목적’, ‘악마적 기도’, ‘북



괴’, ‘무기화’, ‘물의 남침’ 등 어느 신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저속하고 섬뜩한 용어로 반복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섰다.

보도 첫날부터 ‘대응댐’ 건설을 주장한 신문도 조선일보뿐이다. 10월 31일자 사설 <가공할 금강산댐, 이독제독(以毒制毒)의 적극적 대응책을>에서는 “예컨대, 휴전선으로 갈라진 북한강의 수로를 동해 쪽으로 역류시키기 위한 터널수로를 팔 수도 있을 것이다”라거나 “댐을 건설하여 충분한 저수능력을 갖추는 것도 적극적

인 대처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등 ‘대응댐’ 건설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 ‘권고’를 받아들인 듯 11월 26일 정부는 대응댐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는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이른바 ‘평화의 댐’ 건설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한 장본인인 셈이다.

더욱이 평화의 댐은 건설이 중단된 상태라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성급모금에 앞장섰던 각 언론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당시 학계에서 주장한 “정부의 발표 중 댐 높이나 저수량은 과학성과 현실성을 도외시한 채 발전용량을 근거로 무조건 역산출한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12월 25일 북한이 <금강산발전소 건설에 관한 백서>를 통해 남한측에서 주장하는 수공위협은 터

무니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보도되지 않았다. 결국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정부의 조작을 용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김일성 사망설 관련 보도 (86년 11월 16일 ~ 19일자)

‘세계적 오보’ 제조비법 북한관련 보도는 오보해도 좋다?

86년 11월 16일 조선일보가 세계적 특종으로 보도한 ‘김일성 피살설’은 18일 김일성 주석이 몽고 주석 영접을 위해 평양공항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틀만에 오보로 확인되었다.

이를 최초로 보도한 조선일보는 11월 16일자에서 “북한 김일성이 암살됐다는 소문이 15일 나돌아 동경 외교가를 한동안 긴장시켰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휴간일인 17일 호외까지 발행했다. 18일에는 총 12면 중 7개 면에 걸쳐 사망배경, 국내의 반응, 자사의 특종에 대한 자화자찬 등을 대서특필했으며 이 날부터 다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는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의 발표나, 확인된 정보가 없으므로 분명해질 때까지 추측하지 않는다는 미 국무성의 브리핑 등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단신으로 처리, 무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오보로 판명된 후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한국 대외신뢰 실추기도 국민불신 조장 등 노린 듯>이라며 모든 책임을 북측에 떠넘겼다. 특히 “그들 수령의 죽음까지 고의로 유포하면서 그 무엇을 노리는 북괴의 작태에 서방언론들은 정말 놀라고 있다.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알린 셈이 되었다”는 신용석 외신부장의 ‘적반하장’ 격 주장은 조선일보의 후안무치를 대표하는 사례라 하겠다.

4. ‘서울 불바다’ 발언 관련 보도 (94년 3월)

선제기습론 제기하며 전쟁위기 부추긴 자칭 민족지

94년 3월 북미 핵협상 당시 한미 양국은 틱스피리트훈련 재개,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등 일련의 강경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며 북한을 위협했다. 북한은 이를 ‘전쟁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3월 19일 열린 특사교환 실무 접촉에서 강경발언을 했다. 물론 이 날 북측 대표의 발언이 강경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전후관계를 거두절미한 채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만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런 보도는 마치 북한이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남북간에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은 물론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가장 앞장서서 보도한 신문은 조선일보다. 특히 3월 22일자 사설 <정부에도 문책한다>에서는 “동맹관계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아마추어적이라고 비난하며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3월 24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는 불분명한 취재원(평양을 방문했던 중소기업인의 발언과 신화통신 기사)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폭탄주머니를 차고 다니게 하고 전쟁지도를 지급하는 등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자매지 <월간조선>은 더욱 강경했다. 94년 3월호에서 조갑제 기사는 “북한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위적 선제기습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족지’를 자처하는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민족’의 안위보다 신문의 ‘실리’를 우선한다는 상업주의의 속성을 잘 보여 준다.

5. 김일성 사망 조문논쟁 관련 보도
(94년 7월 9일 이후)

“조문 용의 없나”를
“조문 주장”으로 해석한 의도

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선정성과 냉전이데올로기를 가장 심하게 드러낸 신문은 역시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의 선정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김정일 비서에 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결벽증이 심하고 잔인”이라거나 “‘난쟁이 똥자루’ 스스로 비하”(7월 12일) 등 공식적인 매체에 담기 어려운 노골적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김일성 독살 가능성’을 주장하고, <부검 왜 했나, 의혹 무성>(7월 11일), <홍콩 관측통 ‘자연사 위장 타살’ 주장>(7월 13일) 등 사망경위에 대한 온갖 추측보도를 남발해 조선일보는 다시 오보 가능성을 안게 되었다.

한편 김 주석 사망 이후 조선일보의 첫 번째 마녀사냥은 이른바 ‘조문논쟁’으로 시작되었다. 7월 11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한 이부영 의원의 “조문단 파견용의 없나”라는 대정부 질문이 발단이 되었다. 조선일보는 이를 ‘조문사절 운운’, ‘조문 주장’ 등으로 표현하며 이 의원의 발언을 왜곡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7월 20일자 시론 <호지명이 죽었을 때>에서 ‘친북세력 추방’을 문민정부에 요구하며 매카시즘 광풍을 일으키는 일에 정부도 동참하라고 촉구하였다.

6. 박 홍 주사파 발언 관련 보도
(94년 7월 19일 이후)

대한민국 검찰은 안 믿어도
박 홍 총장은 믿겠다?

김 주석 사망 이후 조선일보의 두 번째 ‘마녀사냥’은 박 홍 전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 보

도로 시작되었다. 94년 7월 18일 청와대 오찬에서 당시 서강대 박 홍 총장은 “대학 내에 주사파가 생각보다 깊이 침투해 있으며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이, 사노맹 뒤에는 사로청, 사로청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고 말했다. 사노맹과 사로청의 차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함을 드러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비롯한 각 신문들은 다음날 이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의 ‘박 총장 키워 주기’는 민망할 정도다. 조선일보는 7월 21일 <박 홍 총장의 용기……사회가 보호하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부 지식인들의 박 총장 지지를 대서특필했다. 반면 같은 날 시론 <끌려 다니는 지식인, 뒷북만 치는 정부, 주사파의 천국—한국대학>에서는 박 홍 총장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사상이 의심스럽거나 용기없는 지식인이라도 되는 듯이 매도했다. 뿐만 아니라 “박 총장 발언의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주사파”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총장의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그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박 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은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그의 ‘북한장학금’ 발언으로 성균관대 정현백 교수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중재신청을 했다. 또한 한국통신 노동조합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사파 발언으로 박 총장은 97년 5월 12일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박 총장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했던 조선일보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7. 성혜림 망명설 관련 보도
(96년 2월 13일 이후)

한국언론 오보사에 영원히 남을
‘전설적인 오보’

조선일보가 ‘세계적 특종’이라고 자랑한 <김

정일 본처 서방탈출> 보도는 5개월여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기부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안기부 당국자에 의하면 성혜림이 애초 망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확인된 상태였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월간조선>의 취재내용을 토대로 96년 2월 13일부터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일의 본처가 망명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김정일 후처들이 괴롭혀 결행>(2월 13일 3면), <김정일 여성편력에 가슴앓이>(2월 14일 2면) 등 선정적인 제목으로 망명의 근거를 설명했다. 더욱이 조선일보는 “엄마 보러 모스크바로 갈게요”(2월 13일), “오지 마, 나 지금 무슨 계획있어”, “평양에는 안 들어가……나 갈데 있어”(2월 14일) 등의 표현으로 마치 망명 의사를 밝히는 것처럼 긴박하고 현장감 있게 기사를 써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등 상업적인 접근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2월 17일자에서는 <무너지는 북한……정치권 공안통들의 분석>이라며 이를 북한붕괴론으로 이어갔다.

‘성혜림 망명’ 오보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대표적인 오보 사례로 한국언론사의 오보란에 영원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8. 황장엽 망명 관련 오보
(97년 4월)

김현철 비리사건을
한방에 잠재운 황장엽 특종?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망명과 관련 조선일보는 “평화통일 위해 몸바치겠다”(97년 4월 21일자)는 한 탈북자의 의지를 안보상업주의에 악용했다.

조선일보는 4월 22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 “황씨 논문 <조선문제> 단독입수”라고 밝힌 뒤 <북핵 화학 로켓무기로 남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긴

제목을 먹킷으로 뽑았다. 또한 조선일보가 뽑아 놓은 <무력통일 의심하면 머저리 중 상머저리>, <개방유도맨 오히려 우환……붕괴시켜야> 등의 제목을 보면 황씨가 진심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망명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실제로 이 논문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해외언론은 의혹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4월 23일 한국발로 황씨가 내밀한 군사정보를 알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과 조선일보가 어떤 경위로 논문을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당시 황장엽씨 보도로 인해 김현철씨의 비리보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황장엽 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정부 내 친북세력 색출 시사>, <권 부총리 “황씨가 알고 있을 것”>(4월 23일자)이라며 거의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황장엽 리스트는 결국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정치권은 물론 국제엠네스티도 ‘황장엽 리스트 악용 반대’의 입장을 폈다.(인권하루소식 97년 7월 25일자) 결국 조선일보는 ‘주사파 리스트’에서 범한 우를 다시 한번 반복한 셈이다.

9. 이석현 의원 명함파동 관련 보도
(97년 8월)

이석현 의원의 원천봉쇄한
색깔선동의 노림수

이석현 의원 명함파동은 색깔론을 앞세운 언론의 무차별 공세 앞에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해 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석현 의원은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일어, 아랍어, 중국어 등 7개 국어로 명함을 제작했고 현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어로는 서울(한성), 중국어로는 한국(남조선)을 나란히 써 놓았다고 한다. 실제 중국에서는 남조선이란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8월 20일자 사회면에서 <남조선 국회의원>으로 제목을 뽑는 등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같은 날 사설 <남조선 국회의원>에서도 “국회는 마땅히 이런 무자격 의원의 제명도 불사하는 단호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마녀사냥을 선동했다. 사안의 본질이나 당사자의 의도, 행적 등에 대한 설명없이 여론을 오도하고 감정적인 단죄를 내린 것이다. 이 의원의 해명에 의하면 조선일보에 첫 보도가 나간 뒤 기사와 사설을 쓴 기자와 논설위원에게 전후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본인들도 잘 알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후보의 비서 출신이었던 이 의원은 다음날부터 ‘빨갱이 의원’으로 낙인찍혀야 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석현 의원의 명함파동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주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한다.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해 사회의 이성적 논의를 원천봉쇄한 조선일보의 한 인간에 대한 전횡은 희비극과도 같은 한국분단사의 일그러진 편린이다.

10. ‘양심수 사면’, ‘전향제 폐지’ 관련 보도 (94년 7월 / 98년 7월)

이회장이 하면 인권옹호
김대중이 하면 용공발언?

15대 대선을 앞둔 97년 10월 31일 광주 TV토론에서 김대중 후보는 “우리가 집권하면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들 중에서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사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포문을 열었다. 11월 1일자 1면에 <DJ 집권하면 양심수 사면…… 검찰 안기부 긴급회의>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한 데 이어 11월 2일 <양심수 사면 파문 확산……공안사법 사법판단 부정한 셈>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 조선일보는 11월 2일 <디제이 양심수론>과 6일의 <양심수 재론> 등 연속적인 사설을 통해 “양심수 논란에 전국민

이 참여해서 끝까지 논쟁할 것을 제언” 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당시 여당 후보였던 이회창 씨의 ‘양심수 사면’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의 관용(?)을 베풀었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11월 2일 평화방송 대담에서 “진정한 의미의 양심수라면 정치인 사면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조선일보가 차별적인(?) 보도를 한 진짜 목적은 딴 데 있었던 셈이다.

최근 정부가 ‘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 데 그 어떤 역작용과 부작용을 끼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양심수 몇 명이 사면된다고 해서 현 체제가 곧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도리어 그런 즉각적 접근이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론분열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는 것은 아닐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는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해 내부의 단결을 꺾으려는 부정적 방식으로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욱이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면 내부의 일부가 인권침해를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감정의 폭발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더욱더 위험하다. 우리가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조에서 드러난 ‘국가안보상업주의’ 경향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과 원칙을 내부에서부터 합리적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실천하는 긍정적 방식을 통할 때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조선일보가 민족대단결과 민족재도약의 깃발 아래 21세기를 향해 힘겨운 길을 떠나야 하는 7천만 겨레의 벗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선일보 편집국에 기자윤리는 있는가

조선일보의 노동, 사회, 인권 관련 왜곡, 편파 보도 사례

‘전태일 분신 사건’ 유일하게 보도 안한

조선일보

한국언론에 늘 따라붙는 말이 있다. ‘왜곡보도’와 ‘편파보도’라는 오명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는 사실을 왜곡하고 곧 역사를 왜곡한다. 뿐만 아니라 왜곡 편파보도 속에서 인권 유린은 은폐되거나 정당화된다. 겉으로는 정론적필과 불편부당을 내세우고도 실제로는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은 한국언론. 그 대열의 선봉에는 항상 조선일보가 있었다. 민언련 신문모니터팀이 조선일보 보도비평을 마친 뒤 내린 결론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해 내부의 단결을 꺾으려는 부정적 방식으로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면 내부의 일부가 인권침해를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감정의 폭발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더욱더 위험하다” 우리가 지난호에서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를 비판하며 했던 말이

다(여기에서 ‘외부’는 북한을, ‘내부’는 남한을 가리킨다). 이번호에는 조선일보의 ‘남한판 국가안보상업주의’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아보았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대치되는 현상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고 주저없이 매도하였다. 이런 조선일보의 공세와 횡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한 목소리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묵살 당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과정과 현상이 조선일보의 오만을 키워 온 배경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사실 우리는 그간의 모니터 경험을 통해 조선일보의 이념적 공세와 횡포가 상습적(?)이라는 점과 그 오만함이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지금부터 기술하려는 내용은 그런 고민 속에서 진행된 작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 전태일 분신 사건 관련 보도(70년 11월)

70년대의 서막은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함께 올랐다. 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전태일(당시 22세)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했다. 그는 화염에 휩싸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절규하다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것은 한 노동자가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항거해야 할

전태일 분신 사건 유일하게 보도 안 한 조선일보

전태일 분신 사건은 70년 11월 13일 평양시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일어났다. 당시 22세였던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했다. 그는 화염에 휩싸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절규하다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것은 한 노동자가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항거해야 할



전태일 분신 사건

“자” 조선일보가 전태일 분신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이 사실에서 “질은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면 조선일보는 당연히 사건 보도를 했어야 옳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4시간을 일하고도 한달 월급이 1천5백원밖에 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몫이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1단 기사 하나 내지 않은 조선일보가 과연 사실에서 “우리 사회에 노동운동은

사실을 내보낸 혐의가 짙다. 조선일보는 이 사실에서 “질은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면 조선일보는 당연히 사건 보도를 했어야 옳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4시간을 일하고도 한달 월급이 1천5백원밖에 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몫이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1단 기사 하나 내지 않은 조선일보가 과연 사실에서 “우리 사회에 노동운동은

건재하고 있는가” 라며 노동운동을 타할 자격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구체적으로 노총의 존재 의의와 사명을 묻고 싶은 것이다” 라는 대목에서는 악덕기업주보다는 노동운동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느껴졌다.

2. 부천시 성고문 사건 관련 보도(86년 7월)

기사는 검찰발표문으로, 사실은 “정치적 비화 안된다” 지난 86년 6월 발생한 부천시 ‘성고문 사건’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의 횡포와 부도덕성이 폭로되어 5공화국의 종말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며 인권과 진

실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언론을 향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지만 언론들은 검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와 군사정권의 ‘보도지침’ 만을 금과옥조로 여겼다. 이 과정에서 촌지도 오고간 것으로 밝혀졌다. 89년 1월 13일자 [기자협회보]는 이 사건을 ‘촌지로 얼룩진 언론왜곡의 전형’ 으로 규정했다. [기자협회보]는 “대변인 봉투 건네며 ‘오늘은 좀 많습니다’ “취재기자의 고뇌…… ‘저는 기자도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등의 생생한 증언을 전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한 조선일보의 제목과 기사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예컨대 86년 7월 17일자 사회면 머릿기사에서 [‘성적모욕’ 없고 폭언 폭행만 했다]라는 검찰의 발표문을 제목으로 뽑아 검찰의 주장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운동권, 공권력 무력화 책동]이라는 적반하장격의 제목까지 달았다. 또한 [‘부천시 사건’ 공안당국 분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급진세력의 투쟁전략 전술 일환 혁명 위해 ‘성’ 까지 도구화 한 사건]이라는 검찰 발표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 권인숙씨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다. 결국 이 기사는 “검찰 발표 전문은 꼭 실어 줄 것” 이라는 독재정권의 보도지침에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에서도 이 사건을 보는 조선일보의 ‘빠딱한’ 시각이 읽혀진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7월 18일자 사실 [‘부천시 사건’ 에서 얻는 것]에서 ‘성고문’ 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인권상황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바란다” 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비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진심’ 은 “정치적으로 비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는 이 사실의 결론에서 솔직하게 드러났다.

3. 전교조 결성 관련 보도(89년 5월)

조선일보의 ‘전교조 빨갱이 만들기’ 입체작전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미복직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전교조가 결성된 지 10년만의 일이니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전교조는 비인간적인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개선하자는 교사들의 순수한 열망 속에서 탄생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교조의 노선과 성격이 ‘급진’ 과 ‘과격’ 이 아니라 ‘온건과 ‘합리’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상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대였다.

그런 비상식을 조장한 장본인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마치 교사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전교조가 만들어진 것처럼 왜곡했다. 동시에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와 전교조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의 이견을 부각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신문들은 작은 지면이나마 할애하여 운영규 전교협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는 등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유독 조선일보만은 전교조의 정당한 주장을 전혀 기사화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갔다. 조선일보의 전매 특허(?)인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조선일보는 일부 운동권 교사들이 이념교육을 하기 위해 전교조를 결성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조선일보는 색깔론을 전개할 때면 거침이 없어진다. 예컨대 89년 5월 26일자 [학부모들의 우려]라는 사실에서 조선일보는 “교원노조 문제는 단순히 노동3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 단언했다. 그리고 일부 학교의 어머니회가 제기한 우려를 열거한 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당연한 권리” 라고 했다(그렇다고 전교조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했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다). 결국 조

선일보는 '골치 아픈' 이론 논쟁보다는 '손쉬운' 사상논쟁을 택한 셈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날자 사회면 '기사 배치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선일보 편집자는 [전교협 회장 사무처장 검거령]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간에 [평양학생축전 포스터 단국대에 대량 내붙여]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을 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사진 바로 오른쪽에는 [어젯밤 연대서 교육악법철폐대회]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다. '어수룩한' 독자라면 그 사진이 전교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는 부인하겠지만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교묘한' 편집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5월 28일자 ['교원노조', 이해와 걱정]이라는 제목의 류근일 칼럼은 더욱 교묘했다. 류근일 논설위원은 "우리가 직면한 교육현실의 고질적인 현안들에 대한 근본적인 조명과 타개에 의해서만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말문을 열어 마치 전교조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전향적인 제스처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성동격서(?) 전범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 대목에서 곧 드러난다. 그는 "일부 교사들이 혹시나 그 어떤 치우친 시각에서 자기 자녀들의 역사관과 현실인식을 사뭇 급진으로 몰아가고 물들이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비비폰 말투로 자신의 '본심'을 내보였다. 사상논쟁으로 귀결시킨 것이다.

전교조 결성 이후 조선일보는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5월 30일자 사설 [학교가 싸움판 안돼야—전교조 결성의 파문]에서 "그러나 그것(법의 규제)을 모를 리 없는 교육자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며 '불법성'을 강조하였다. 조선일보는 이어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기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교사들의 방식을 최선이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 '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4. 유서대필 의혹 조장 관련 보도(91년 5월) 진상규명 필요 없다 마녀사냥이 최고다?

지난 91년 5월 8일 김기설씨의 자살로 야기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에서는 세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유서대필 여부, 수첩조작 여부, 김기설씨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씨의 엇갈린 진술의 진위 여부가 바로 그것이었다. 특히 유서대필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언론은 검찰과 강기훈씨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필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다. 특히 조선일보는 교묘하게 지면을 구성하여 대필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검찰의 발표는 사회면 머릿기사나 적어도 6단 정도로 '크게' 기사화한 반면 강기훈씨를 대변한 전민련의 발표는 2-3단으로 '작게' 취급하였다.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던 셈이다. 5월 9일 조선일보는 김기설씨의 분신 보도를 중심으로 아래에는 [분신현장 2-3명 있었다]라는 제목의 검찰발표를 실었고 왼쪽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세력 있다]는 제목으로 박 홍 전서강대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5단에 걸쳐 실었다. 이들 기사의 제목과 지면 구성은 김기설씨의 죽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기에 충분했다.

조선일보는 5월 19일자에서도 검찰발표를 인용해 [“김기설씨 유서 필적다르다” 검찰대필 용의 20대 전민련 간부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뽑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 기사는 김씨가 10년 전 조카의 생일에 보냈던 축하카드 글씨와 유서 글씨를 같이 실어 대필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편 조선일보는 6월 15일자 사설 A천주교측의

정당한 결정B에서도 “대필한 사실이 없다면 떳떳이 나와서 수사에 응할 일이지...수사는 고사하고 일체의국가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듯 버티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강씨를 몰아 붙였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은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담당자인 김형영씨는 80년, 92년, 98년 세 번에 걸쳐 허위감정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따라서 불충분한 증거로 유서대필을 기정사실화하고 한 청년의 인격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던 조선일보는 이 사건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에게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조선일보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5. 철도 지하철 파업 관련 보도(94년 6월) [가장 부적절한 파업]은 '가장 부적절한 사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인식은 철저히 도식화된 것이었다. 우선 조선일보는 파업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을 '폭력파괴집단'으로 매도하였다. 한편으로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강조하여 노동자들에게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반응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나 집단행동이 있을 때마다 그대로 반복되었는데 지난 94년 6월 철도 지하철 연대파업에 대한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그에 대한 반발로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된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자

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와 달리 파업을 촉발시킨 공권력투입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도리어 사실을 동원해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인데 조선일보는 아예 '때리는 시누이'로 나선 셈이다.

조선일보는 6월 17일자 사설 [가장 부적절한 파업]과 6월 24일자 사설 [불법과는 타협 없다] 등을 동원해 노동악법 조항을 근거로 노동자단체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일에 급급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 내부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파업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해 본질을 희석시키는가 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강조하였다.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며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혼수한 셈이다. 아울러 철도 파업과 함께 진행된 일부 사업장의 연대파업에 대해서도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파업자에 단호한 조치를(6월 28일자 사설 제목) 취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파업 발생 당일 '교통대란' '정치투쟁' '국민이 인질인가' 등의 용어를 동원해 파업에 대해 비난하고 매도하는 기사도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그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검찰 본격 수사] [수출 지체 하루2백억] [대정부 선전포고] [전직기관사-시민 "한마음 운행"] 등의 제목을 동원해 파업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강조하였다. 사용자의 입장만 옹호하는 한편 정부의 강경대응을 유도한 셈이다.

6. 연세대 사건 관련 보도(96년 8월) 경찰에게 강경진압 촉구한 조선일보의 정신상태

지난 96년 8월 발생한 연세대 사건에 대해 한국 언론은 객관성을 상실한 채 왜곡 편파보도로 일관했다. 당시 언론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불

구하고 정부와 검찰의 입장만을 사실인 양 보도함으로써 ‘객관보도’ 라는 보도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을 1면 혹은 머릿기사로 가장 많이 다룬 신문도, [한총련, 연대 과학관 ‘불모’ 대치 “산소통 터뜨리겠다” 협박] [주사파가 장악...폭력투쟁 선동] 등 선정적인 제목을 애용한 신문도 조선일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금언을 잘못 이해한 것일까. 조선일보는 호전성(?)을 유감없이 노출시켰다. 8월 20일자 1면 기사 [필요하면 총기사용]과 8월 28일자 39면 기사 [폭력시위 ‘고무총탄’ 쏜다]에서 알 수 있듯 경찰발표를 부각시켜 보도한 것이다. 물론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은 전혀 없었다. 조선일보는 학생들에 대한 발포마저 고려되는 극히 위험한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이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강경진압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혹시 조선일보는 8월 23일자 사실 [경찰진압의 문제]도 있지 않냐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독자들은 그 제목에 현혹되면 안된다. 여기서 조선일보가 비판한 것은 결코 경찰의 강경진압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조선일보는 “무엇보다 경찰의 의지와 의욕의 부재가 큰 문제다” 라면서 “경찰을 이대로 나 뒀서는 안되겠다”고 호통을 쳤다. 더욱 강경한 진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목에서 우리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된다. 그것은 동시에 펜을 함부로 휘두르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한다). 실제로 격렬한 시위의 원인이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에 있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이런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한편 조선일보에서 두드러진 것은 역시 ‘색깔론’ 공세였다. 조선일보는 14일자 [‘신촌사태’의 본질]에서 한총련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과 한 패거리가 돼 쇠파이프와 육탄공세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집단”이라고 규정한 뒤 “친북 세력의 이런 밀어붙이기는 지금 착실히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일부 학생들의 친북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한총련 소속 학생 전체를 친북으로 단정하는 조선일보의 마녀사냥식 재판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는 그 동안 학생운동이 통일논의를 대중화하고 진전시키는데 기여한 점을 전면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연세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한총련 학생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이 역시 조선일보가 가장 심했다. 조선일보도 8월 20일자 47면에서 인정했듯이 “대학생들은 1백여 명이 탈진상태…… 경찰봉쇄로 음식물 공급이 끊기자……”와 같이 생명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엄마’ 작전]이라는 제목의 사실을 동원해 혹시라도 생겨날지 모를 학생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심을 차단하려 했다. “다분히 정서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웬 갑작스런 엄마타령인지……눈물짜기 작전”이라는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처지를 비아냥거리는 언론의 횡포에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7. 북한 식량지원 관련 보도(97년 3월~5월) 굶어 죽는 소말리아는 도와도 북한동포는 안된다?

지난 97년 봄과 여름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다. 당시 북한은 수해와 가뭄 등 계속된 자연재해로 사상 조유의 식량난을 겪고 있던 터였다. 빼만 남은 앙상한 팔다리의 북한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먹는다는 북한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북한동

포돕기운동의 물결이 이어졌다. 김수환 추기경의 말처럼 굶어 죽는 사람을 두고 보는 것은 “동포애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조선일보가 나섰다. ‘동포애’를 ‘전도된 대북지원 논리’로, ‘인간의도리’를 ‘감상적’이라고 폄하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97년 3월 31일 정부의 쌀지원 허용 발표 이후 사실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분배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조선일보가 형식적 논리를 내세운 ‘심사’가 무엇인지 읽혀진 셈이다. 이는 다음의 대목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조선일보는 민간 차원의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해 ‘감상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애국은 죄의식만 짜내려는 전도된 대북 지원논리’라고 몰아붙였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비난한 것이다.

물론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에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결핍으로 키가 자라지 않고 두뇌발달이 정지됐거나, 심지어 굶어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는 데도 굳이 “실상이 과장되어 있고 과장법을 통해 군량미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도리는 아닌 듯하다. 이는 목숨을 담보로 흥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7년 5월 말 지정기탁제도의 합의로 투명성이 확보되고 북한군 식량탈취가 오보로 확인된 이후에도 조선일보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동포의 굶주림을 방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쌀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북의 태도가 변한 다음에”라는 토를 달았다. 심지어 [북의 추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실을 신기도 했다. 정부도 부정한 대북정책인 ‘흡수통일’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해 ‘휘몰이하는 식’이라거나 ‘감상적’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당시 1년에 8조원을 음식쓰레기로 버리는 남한과 먹을 것이 없어 참혹하게 죽어 가는 북한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감상적인지 자명해진다. 조선일보는 급기야 4월 14일자 사실 [북 기아 우리탓이라고?]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도 식량자급율이 27%밖에 안되고 외채가 1천억달러에 이른 빚더미에 앉아 있다”며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고베 지진 때나 아프리카 난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자고 했던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조선일보의 ‘남한판 국가안보상업주의’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6월 29일자 칼럼 [‘금강산행’의 조건]에서 조선일보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기대로 남쪽이 달궈지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시대적 흐름이 바뀔 수는 없다.

최근 잠수정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경제 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소가 북한으로 가고 금강산 관광도 목전으로 다가왔다. 통일 독일의 한 국회위원은 조선일보의 지면을 빌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통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 뒤에 얻는 기쁨은 희생과 고통보다 크다”라고. 조선일보가 경청해야 할 고언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기획모니터-3
98년 10월호 '말'지

<조선일보 개혁의 논리와 대안>
조일보의 전두환 찬양곡필사

조선일보의 전두환 보도기사는 '현대판 용비어천가'

80년대 한국언론사는 한마디로 굴종과 왜곡의 역사였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 동원한 대표적인 통치수단이 바로 언론이었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권력이 던져 주는 보도자료와 보도지침에 따라 움직였던 충견에 불과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전두환 정권 옹호와 찬양의 선봉에 섰다.

우리는 지난호에서 조선일보가 사회의 모순에 맞서 변화를 모색하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는지를 목격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태도를 분석해보니 양상은 정반대였다. '적대적'은 '우호적'으로, '공격'은 '찬양'으로 바뀌었다. '토황소격문'이 하루아침에 '용비어천가'로 바뀐 셈이다. 일찌감치 광주시민을 '난동자'로 매도하며 권력자의 품에 뛰어든 조선일보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가 설치된 이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독재자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을 서슴지 않았다.

1. 전두환 집권과정 관련 보도

'대통령 만들기' 곡필 원조는 「인간 전두환」
광주에서의 '화려한 휴가'를 마친 신군부는 80년 5월 31일 국보위를 설치했다. 그것은 그들이 권력장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가 전두환에 대한 찬양과 미화를 본격화한 것도 바로 이 때부터다.

조선일보는 80년 6월 8일자에 「국보위, 일대 사회개혁 단행 방침」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정치군인들이 헌법을 파괴하고 급조한 초헌법적 기구의 활동을 아무런 비판없이 부각시킨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어 8월 5일자 1면 머릿기사로 「전국 불량배 일제 소탕」을 올렸다. 더욱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사회악 수술에 대한 기대」에서 "국보위의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는 바로 심층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에 대한 기대"라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중에 히틀러식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평가받은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를 정당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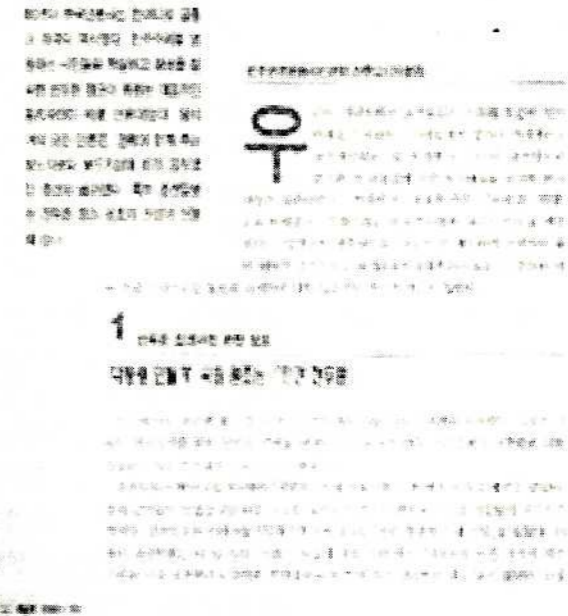
이후 전두환의 일거수일투족과 5공정권이 수행

하는 거의 모든 방침은 조선일보 1면 머릿 기사를 장식했다. 전두환을 지지하는 사실도 빠짐없이 수반되었음은 물론이다. 전두환 개인을 본격적으로 미화한 것은 8월 23일자 「"새역사 창조에 신명 바치겠다" 전 육군대장 전역식」이라는 기사부터다. 조선일보는 전역식 다음날인 8월 24일 「"새시대" 개막과 새정치」라는 좌담 기사에 「가장 잘 훈련·조직된 군부엘리트, 도덕성·성실성 높고 진취력 강해」 등의 제목을 뽑아 전두환의 지도자적 자질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 8월 28일자 「새시대의 개막-전두환 장군의 대통령 당선에 제하여」라는 사설을 보면 "우리는 우선 전두환 대통령의 당선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하며 그 전도에 영광이 있기를 희원해 마지않는다……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바야흐로 새시대 새역사는 개막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전 대통령 정부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걸고……"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당시 '우리'라든가 '국민'으로 통칭되는 사람들 중 과연 누가 제 국민의 피를 손에 묻히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에 게 소망과 기대를 걸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에 대한 미화 기사 중 백미는 8월 23일에 실린 「인간 전두환」이다. 이 기사에는 「육사의 혼이 키워 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사에 앞서 공...나보다 국가" 앞세워」, 「이해관계 얽매

조선일보의 전두환 보도기사는 '현대판 용비어천가'



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시절엔 축구부 주장」 등의 낯뜨거운 소재목이 등장한다. 기사 내용은 더욱 민망하다.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선 잠시도 참지를 못하는 불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 운운하는 작태를 보면 신문 기사인지 위인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2. 조선일보의 전두환 보도 빈도 전두환 사진 한 달에 22일 1면 등장 '진기록'

5공화국 당시 전두환의 사진은 조선일보 1면에 얼마나 자주 등장했을까. 우리가 81년부터 87년까지 7년 동안 12개월을 무작위 선정해 분석한 결과는 <표-1>과 같다. 조사결과 전두환 사진 게재 빈도수는 평균 53.8%로 동아일보의 44%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83년 5월의 경우에는 무려 22일이나 사진이 실린 것으로 드러났다. 휴간일을 염두에 둔다면 이건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지금 결코 노동신문이나 인민일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간과해선 안될 것이 있다. 분석 대상 기간에 포함된 86년 10월에는 아시안 게임이, 87년 12월에는 KAL기 폭파사건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그런 큰 뉴스가 있었기에 전두환 사진은 더 자주 게재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신문 1면에 대통령의 사진을 거의 매일 등장시키는 언론에게서 정권의 비리나 실정을 지적하려는 비판정신을 기대하기 힘들다. 조선일보 1면에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대통령만이 있을 뿐이다. 흔히 말하는 '맹전뉴스'는 조선일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매년 새해 첫날 1면에는 대통령의 신년사가 어김없이 실렸다. 조선일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의 신년사와 자사의 연두사를 위아래에 나란히 배치했다는 점이다. 편집 기교상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자칫 전부 대통령의 신년사로 착각할 정도다. 뿐만 아니라 제목도 천편일률이다.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세계의 중심권으로 계속 전진」, 「동행자 의식으로 안정 이룩」 등의 제목에서 독재정권의 만행과 암울한 시대상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고?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가서 당시의 조선일보를 들춰 보라.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3. 전두환 업적 평가 관련 보도 ‘민주주의 파괴자’를 ‘민주주의 완성자’로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뽑혔다. 특히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그는 ‘민족사의 부정적 인물’ 3위에 뽑히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집권기간 동안 매년 3월 3일 취임 기념일 전후에 전두환은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장본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의사회를 실현한 영도자로 추앙받았다. 바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다수 보수언론에 의해서.

취임 1주년인 82년 3월 2일자 「자율사회 문을 열었다」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통일문제에서 전 대통령은 가장 현실적이며 과감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과찬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제5공화국 1년」(3월 3일자)이라는 기획기사에서는 “전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통치철학은 ‘민주복지국가’의 건설과 정의사회의 구현으로 자주민족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83년 취임 2주년에도 「‘화기’로 안정 다진 제5공화국」(3월 1일자) 「의지로 이끄는 경제 ‘한 자리 물가’ 기록」(3월 2일자), 「우리 시대 모두의 과업 ‘선진조국의 꿈」(3월 3일자) 등 극찬이 이어졌다. 게다가 이 기사들에는 농가에서 전두환 부부가 농민들과 식사를 하는 사진, 청와대에 초청된 어린이와 함께 한 사진이 보기 좋게 곁들여졌다. 전두환 집권기간 동안 찬사는 쉽없이 계속됐다. 조선일보는 집권 후반기인 86년 3월 4일자 「전 대통령의 치적과 과제」에서 “전 대통령 시대의 지난 5년은 대내적으로는 안정을 바탕으로 한 착실한 성장, 대외적으로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굳건히 다진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의 개인적 성품에 대한 미화에도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82년 3월 4일자 「부지런한 대통령...사람 많이 만난다」에는 “솔직하고 성실하고 활달하면서도 늘 자신감에 차 있는 전 대통령의 성품.....대통령의 성격 중 제일 좋은 것이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 주는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물론 조선일보처럼 정권에 협력한 사람들의 의견이야 잘 들어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시의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만저만한 오해가 아니다. 특히 3월 1일자 「‘화기’로 안정 다진 제5공화국」의 “외유내강이랄까 자상하고 섬세하며 줏대가 있으나 인정미가 많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는 분”이라는 표현은 기사라기보다는 제도교육을 잘 받은 초등학교 모범생의 ‘위인전 감상문’ 수준에 불과하다.

4. 해외순방 관련 보도 집권연장 부추긴 조선일보의 ‘세계지도자론’

5공화국 집권기간 동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진행된 대통령 해외방문은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전두환의 위대성과 인물됨됨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좋은 배경이었다. 예컨대 81년 미국방문 당시 조선

일보 지면에 올려진 제목을 보자. 「솔직하고 확신에 찬 연설...분위기 휘어잡아」(2월 4일자), 「워트로 이끈 오찬장 화기의 폭소」(6월 27일자), 「운동복 차림, 털어놓고 긴 대화」(6월 28일자), 「교민들과 된장국 들며 격려」(4월 8일자) 등등. 조선일보는 해외방문 기간 전두환의 모습을 유머와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소탈한 모습으로 시종일관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을 ‘세계적 지도자’로 내세우는 데도 열성적이었다. 「환영, 방콕 뒤덮은 태극기 물결」(81년 7월 4일자), 「왕실 전통 깎 환대」(4월 9일자) 등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환대받는 모습을 기사화하여 전두환을 국제적인 지도자로 부각시킨 것이다. 사진 속에서도 전두환은 손님을 맞는 주인처럼 여유있고 자애로운 사람으로 그려졌다. 해외방문 기사와 관련해 환영 인파의 모습도 빠지지 않고 조선일보 지면을 장식했다.

순방성과를 과장한 기사도 적지 않았다. 81년 전두환의 미국방문에 대해 조선일보는 「‘철군불안’에 깨끗한 종지부」라는 제목의 특집대담을 실었는데 「안보에 대한 공통된 인식...두 정상 의의기투합」이라는 소제목까지 뽑아 전두환의 외교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한·미 새 동반 시대」라는 특집기사(5회)와 관련 사실을 순방기간 내내 신기도 했다. 86년 유럽순방 때도 「전 대통령 다진 길에 꾸준한 보충 외교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상호간의 회박성을 일소시키고 새롭고 활력있는 관계”를 만들었다며 추켜세웠다.

사실 이러한 언론의 무조건적인 지지 때문에 민심을 오판한 전두환은 정권 연장을 기도하게 된다. 급기야 국민의 개헌 열망을 무시한 채 87년 4월 13일 호헌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긴 자충수였다.

5. 4·13 호헌과 6·29선언 관련 보도 호헌해도 개헌해도 언제나 ‘탁월한 선택’

전두환은 87년 4월 13일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논의를 올림픽 이후로 미룬다는 것과 현행법(대통령간선제) 하의 대통령선거 실시 방침을 발표했다. 그것은 대통령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뽑고 싶다는 국민들의 소박한 의지를 무시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권력의 편에 섰다. 호헌 발표 다음날인 4월 14일자 사설 「4·13 결단」을 통해 “현행 헌법에 따른 당초의 단임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시간적·상황적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정국을 설명하며 쓴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다”라는 표현이 걸작이다. 조선일보에게 전두환은 로마제국의 황제로 보였던 것일까. 조선일보는 민주화도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무식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왜 자꾸 나서서 개헌이니 직선제니 떠드냐는 심보였을까.

그러나 호헌조치를 통해 정권연장을 기도하려 했던 전두환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바라는 국민, 재야, 야당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민주화를 염원하며 절대권력에 항거한 국민은 87년 6월 29일 절대권력으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6·29선언이 국민들의 투쟁으로 얻어 낸 성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는 6·29를 수용한다는 요지의 대통령 특별담화를 다룬 7월 2일자 사설에서 잘 드러난다. 이 사설은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제안은 집권세력의 공식명제로서 확고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논리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서까지 무조건 옹호하고 보는 조선일보의 줏대 없는 보도는 88년 2월 전두환이 물러나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6. 전두환 퇴임 관련 보도 때가 되어 물러나는 것도 위대한 업적?

전두환은 88년 2월 25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를 전후해 조선일보는 단임제 실현의 의미를 '열렬히' 강조하기에 급급했다. 거기에서 5공화국의 불행한 탄생과 집권기간 동안 발생한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2월 21일자 전두환 퇴임회견을 기사화한 조선일보는 「'4·13' 이후 가장 괴로웠다」며 인간적 고뇌를 부각시켰다. 특히 2월 24일자 「떠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홍사중 칼럼은 "권좌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굽히지 않은 전 대통령의 결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라고 예찬한 뒤 "아무리 강력한 인간이라 해도 권력의 부패를 끝까지 견디어 낼만큼 강하지는 못하다"며 절대권력을 누리 온 전두환의 인간적 고뇌와 어려움을 헤아리기에 바빴다. 2월 25일자 이영덕 정치부 차장은 기자수첩 「송구영신」을 통해 "약속된 단임제는 상당한 찬사가 따를 수 있다고 해야겠다"며 단임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고 있다. 이 기사는 "권력에 대한 끝없는 유혹과의 싸움이다. 역대 대통령 중 그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셈이다"라면서 전두환에 대한 아부로 일관했다.

퇴임 다음날인 2월 26일자 사회면에는 「"대통령이 시민 됐다" 환영」 「막걸리 대접하며 "자랑스럽습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7년 단임의 약속을 실현하고 돌아온 전 전임 대통령을 맞는 연회동 주민들은 이 날 아침부터 환영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고 쓰고 있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시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무슨 대단한 공적이라도 남긴 양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무래도 자칭 일등신문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라 할 수 있다.

7. 5공화국과 조선일보

초고속 성장의 비결은 권언유착

조선일보는 5공화국이 들어선 80년대에 급격히

성장했다. 우선 이 기간 동안에 수치상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 준다. 80년 대비 87년 매출액이 4백 28%, 79년 대비 87년 자산총액이 9백27%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사주는 중앙일보의 당시 전문경영인 홍진기를 제외하면 개인소득세 고액납부자 1백위 안에 든 유일한 언론인이다. 폭압의 80년대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초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5공화국의 언론정책이 그런 환경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대량해직 등의 폭력적 구조조정으로 공급이 한정됨으로써 소수 언론사에 시장독점이 자연스럽게 부여됐다는 것이다. 75년·80년 언론과동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해직기자가 적었던 관계로 양질의 인력이 축적되어 이것이 편집과 취재의 우위로 이어졌다는 설명도 있다. 80년대의 경제 활성화로 인한 광고시장의 성장과 조간신문 선호현상도 조선일보의 우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에선 뛰어난 경영능력과 앞서가는 정보력, 편집에서의 기술우위 등 조선일보의 내재적 주체역량이 성장배경이 되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앞서 모니터에서 드러났듯이 5공의 통치논리에 한점 어긋남 없이 순응한 것은 권언유착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물론 당시에 조선일보만이 협조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5공에 부역한 언론인이 유독 많았던 경향신문은 서울신문보다도 더 친정부적인 논조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초법적 기구로 만든 입법회의에 당시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이 참여했던 점이나 5공 출범부터 언론정책의 기초를 형성했던 허문도, 이후 정부여당의 요직을 차지한 김윤환과 김용태, 80년부터 85년까지 편집국장을 지내고 바로 민정당 전국구 의원 배지를 단 최병렬 등 5공의 핵심부에서 일했던 인물들이 전부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사실은 권언유착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가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전두환을 찬양

하며 호헌을 지지했던 것은 단순히 억압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통치이데올로기에 적극 공감하여 협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론은 마땅히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탈법적인 권력을 비호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합리화한 것이 '합리적 개혁을 포함하는 광의의 보수'로 치장될 수는 없다. 그런 걸 다르고 속 다른 치장으로 더 이상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21세기를 앞둔 문명사회에서 한 권력자에게 '현대판 용비어천가'를 바친 대가로 얻은 일등신문의 명성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8. 전두환과 조선일보

기회주의자는 기회주의자를 질투한다?

"낮뜨겁다 못해 속이 뒤틀린다." 시정잡배의 육두문자가 아니다. 언필칭 일등신문 조선일보 9월 3일자 '만물상'이란 고정란에 등장한 표현이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의 합당에 대한 조선일보의 독설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인제 등 국민신당 관계자들을 '기회주의자'로 몰아붙였다. "어제까지 김영삼이라는 맹주를 받들며 김대중 타도에 반성을 바치다시피 했던 사람들이 김영삼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김대중 세력 앞에서 만세삼창을 부르는 장면은 너무나 희극적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것이 '똥 묻은 개'의 분수 모르는 양탈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해 없기 바란다. 국민신당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조선일보의 철저한 기회주의를 생생하게 기억하기에 하는 말이다.

80년 9월 1일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전두환은 잠실체육관에서 9천여 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에서 "사심 없는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이 나라의 장래가 더욱 명량하게 번영 속에서 발전하기를 염원하고자 할 따름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95년 12월 2일 '권력의 끈이 떨어

진' 전두환은 연회동 골목에서 옛 부하들을 거느리고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그 원죄에 대한 자복이 없는 한 전씨의 백마디 말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실었다.

여기서 전두환의 '원죄'란 다른 아닌 광주학살과 권력형 부정부패를 말한다.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을 폭도로 매도하고 학살자를 영도자로 찬양한 조선일보. 그러나 자칭 영원한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는 자신의 '원죄'를 망각한 채 유한한 '낮의 대통령' 전두환에게 원죄를 자복하고 무릎을 꿇으라며 호통을 쳤다. 그러나 계엄군의 전남도청 무력진압 다음날인 5월 28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사실이 실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감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 군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쿠데타군의 노고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는 망국했던 것일까. 조선일보 사주(방우영)와 간부들(송지영, 김윤환, 남재희)은 쿠데타의 전과물을 합법화(?)하기 위해 급조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참여했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부정한 권력의 공범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오호 통재라! 김윤환, 최병렬 등 조선일보 간부 출신 정치인들은 김영삼의 지시에 따라 95년 12월 전두환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5·18특별법 의원입법안에 서명했다.

정치인의 기회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나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자격자들이 도리어 목청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희극적이다. 적반하장의 비판을 보고 있노라면 낮뜨겁다 못해 속이 뒤틀린다.

조선일보 기획모니터-4
98년 11월호 '말'지

<조선일보의 박정희 3선개헌/유신개헌 지지찬양곡필사>
**'체육관 대통령' 뺏으려고 선포한
계엄령도 '구국의 영단'**

박정희 정권 18년. 경제개발과 민주파괴라는 양극단의 담론으로 상징되는 박정희 정권의 역사적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조장하는 요란한 미화작업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장기집권에 협조한 대가로 사익을 챙기고 부귀를 누렸던 사람들의 '박정희 되살리기'에서는 안스러움마저 느껴진다.

박정희 시대를 유지시켜 준 것은 물론 권위주의적 무력통치 그 자체였다. 그러나 언론을 비롯한 지식인 집단의 직, 간접적인 협조가 없었더라면 박정희 시대는 모래 위의 성에 불과했을 것이다. 특히, 언론은 누가 봐도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해 헌법을 바꾸는 것이 분명한데도 역사적 명분보다 기업의 실리를, 국민에 의한 책임보다 정권에 대한 협조를 우선시했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일보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졌음이 모니터 결과 확인되었다. 조선일보는 3선개헌 초기에는 형식적 중립의 가면을 쓰고 개헌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쓰다가 개헌 직전부터 노골적인 지지로 기울었다. 그러나 유신개헌 무렵부터 조선일보는 표면적으로나마 내

세우던 중립마저 내던지고 노골적인 개헌지지로 돌아섰다.

1. 69년 3선개헌 관련 보도

국민투표 앞두고 각계인사 동원해 박정희 업적 찬양

3선개헌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는 대단히 기회주의적이다. 조선일보는 초기에는 개헌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찬반양론을 기계적 균형으로 기사화하기에 이르렀고 개헌 직전과 직후에는 노골적인 개헌 지지로 기울었다. 3선개헌이 있었던 해인 69년 1월 11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정부와 국민의 거리감을 단축시킨 의의]라는 사실에서 조선일보는 "헌법은 국가기본법이니만큼 그때 그때의 집권형편에 따라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국가의 형편이 꼭 필요하다면 고칠 수는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러한 논조는 일단 개헌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명백한 반대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헌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열어 주었다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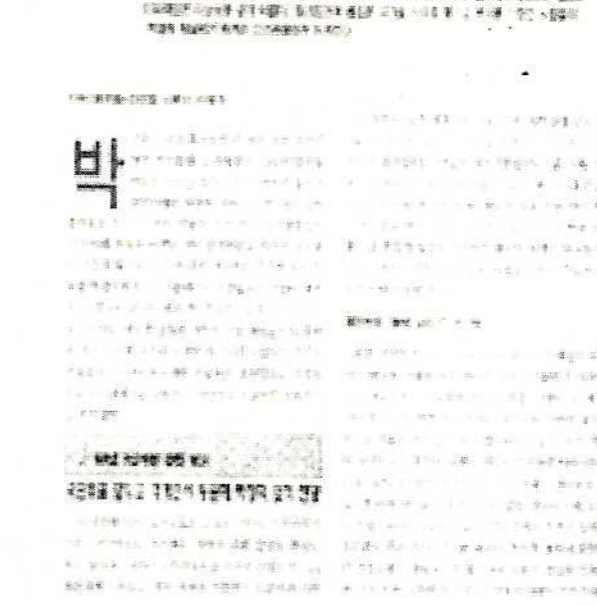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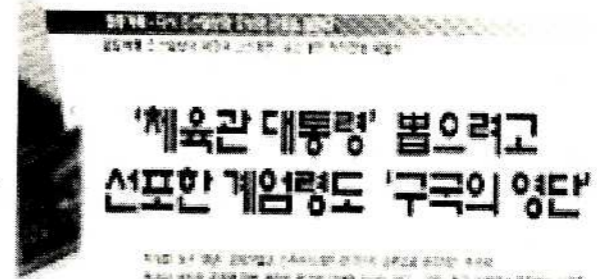
석이 더 타당할 것이다.

개헌논의 '불씨 살리기' 안간힘?

특히 조선일보는 "그 '필요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이 대다수 국민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얼마든지 여론조작이 가능한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대다수 국민에 의한 인정'이라는 조건으로 개헌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것은 결국 개헌 합리화의 길을 터 주기 위한 포석으로 읽혀진다. 실제로 개헌안 국민투표 다음날인 10월

18일 1면에서 조선일보는 [국민투표 : '개헌찬성' 압도적]으로 크게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10월 19일 사설 [국민의 심판은 끝났다 - 다수결에의 복종과 함께 소수파도 존중]에서도 "올해 최대의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개헌문제가 이렇듯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결말을 짓게 된 이상 비록 치열한 반대 세력이었다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이제는 다수결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과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이 도리어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복해 있던 개헌론은 69년 5월 초 윤치영 공화당 의장서리의 회견을 시발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당시 윤 의장서리의 발언은 박정희정권이 측근을 통해 '여론 떠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그러나 조



선일보는 5월 9일자 1면에 [개헌론-그 부침과 향방/길 트인 '사건' - 여야 논쟁 불가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여당 인사가 던진 '불씨'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객관적인 보도'라는 명분 하에 개헌논의에 대한 '불지피기'에 나섰다. 지면에 찬반양론을 동등하게 기사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개헌논의 본질에 대한 정면비판은 회피한 채 '객관적인 형식'을 빌린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오히려 "여론 추이 따라 개헌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는 윤 의장서리의 발언에 부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선일보가 개헌을 바라

보는 시각은 반대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었다. 5월9일자 사설 [부질없는 '개헌' 논의]에서 조선일보는 "지금은 개헌운운의 시기가 아니라"며 "절대적인 필요성과 거론해도 좋을 시기가 도달했다고 공화당이 판단했을 때 개헌논의의 정도를 걸어 국민의 활발한 비판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입장은 무엇보다도 개헌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9월 14일자 사설 [개헌안의 변칙통과]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하루 이틀 표결을 연기하여 질서 있는 표결을 위해 야당과 협상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국가대사에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대목에서 절차상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개헌 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이 사설은 절차상의 문제로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어쨌든 개헌안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한 고비

를 넘긴 셈이다 …… 그 표결방법의 유무효는 별도로 치고, 실은 이제부터가 더 큰 고비인 것이다”라며 결국 날치기 통과를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인정하여 개헌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공고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며 국민투표에 그 책임을 넘기고 있다. 10월 9일자 사설 [국민투표 실시의 공고]에서도 조선일보는 “국민의 민주주의식만 건전하다면 그렇게 심각할 것 없건만” “우리 민도(民度)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자” 등의 표현을 통해 국민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면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훌륭한 영도자를 중심으로”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미 개헌지지로 돌아선 상태였다. 이는 조선일보의 이후 보도와 논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69년 10월 16일자에 게재한 [‘영광의 후퇴’보다 ‘전진의 십자가’를…] “나는 나를 버리고 국가를 위해 한 번 더”라는 낯뜨거운 제목의 기사는 그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선을 끄는 부분은 [각계인사들이 본 ‘성장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조선일보가 선택한 11명의 ‘각계인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발언했다.

“건설 중단은 혼란만 초래”(박복산/중앙대 교수) “안보 위해 정치적 안정을”(박일경/헌법학자) “정국의 안정이 제일조건”(심상준/제동산업 사장) “대의적으론 국위선양”(이한원/대한계분 사장) “부정 시인은 올바른 자세”(김동익/동국대 총장) “지속적 발전엔 안정이 필요”(민병구/서울상대 학장)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김용관/서울치대 교수) “보다 잘 사는 내일을 위해”(신영균/영화배우) “훌륭한 영도자를 중심으로”(최은희/영화배우) “우리에게도 기적은 있었다”(안은숙/영화배우) “강력한 영도력의 지속을”(강부자/탤런트). 개헌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의견만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기사가 국민투표를 앞둔 시점에 게재됐다는 점이다. 결국

‘각계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권유한 셈이다.

2. 72년 유신개헌 관련 보도

계엄령도, 언론검열도, 통일주체국민회의도 좋다?

유신시대로 접어들 무렵부터 조선일보는 그간 표면적으로나마 내세우던 양비론을 거둬들이고 노골적인 지지와 찬양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남북대화를 뒷받침하며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라는 명분 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국회해산과 모든 정치활동의 금지, 대학가 휴교와 언론·출판·방송의 사전검열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유린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당시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려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를 이용해 박 정권은 “너무나 갑작스러워 국민의 의표를 찌르는”(조선일보 11월 24일자 [유신헌법 확정을 보고] 좌담회 중 박일경 발언 중에서) 헌정파괴를 감행한 것이다.

“유신개헌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조치”

이 폭거에 대해 조선일보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갖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적극적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각계의 지지성명과 긍정적 반응만을 보도함으로써 독재권력의 장기집권 음모를 정당화했다. 조선일보는 유신 선포 다음날인 10월 18일에도 [평화통일을 위한 신체제]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각종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유신 합리화에 열을 올렸다. 이 사설에는 “앞으로의 보다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얻기 위하여 진정 알맞은 조치임을 기쁘게 생각”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보다 분명하게 유신에 대한 지지와

환영을 밝힌 표현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헌법 기능의 일부 정지와 아울러 이에 따르는 몇 가지 조치가 선포된 것은 새로운 헌정질서의 존립을 위하여 만부득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헌정파괴’를 정당화한 것이다. 심지어 이 사실에는 “비상사태는 민주제도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하나의 탈각이요 시련이요 진보의 표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독재권력 정당화에 급급한 나머지 궤변과 곡필을 늘어놓은 것이다. ‘국제정세와 남북대화 국면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는 유신의 명분이 허울뿐이라는 것은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면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 헌법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하게 되고, 대통령이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통일주체국민회의가 뽑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일명 유정회 의원)에 대한 일괄 추천권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1인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유신개헌 전후의 한국 사회는 무조건 유신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사건을 시작으로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도시빈민들의 광주대단지사건, 대학생들의 교련반대투쟁, 언론인들의 언론자유수호투쟁 등이 잇따랐다. 재야에서도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결성되는 등 반독재투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더욱이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신민당 후보는 도시표의 52.3%(특히 서울에서 58%)를 얻는 성과를 올렸다. 총선에서도 야당이 이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의석을 차지했다. 양대 선거 결과는 독재정권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었던 셈이다.

유신개헌은 바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정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헌법 개정안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에 급급했다. 조선일보는 10월 28일 [유신적 개혁의 기초-민주주의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헌법]

이라는 사설에서 “발의측의 문제의식이 이렇듯 왕성하고 과감한 개혁이 담긴 개헌안을 우리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극찬했다. 또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민주제도의 후퇴를 가져온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을 직접 선거함으로써 빚어졌던 여러 가지 폐해와 부작용을 일소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한 것이다. 의회를 행정부에 종속시킴으로써 대통령이 견제 당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도 “알맞게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신개헌과 관련해 조선일보의 국학아세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는 같은 날 실린 헌법 개정안에 대한 해설기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아시아 질서는 미일의 중공 접근 내지 수교로 안정체제의 균형이 깨어질 것으로 판단…이 중대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헌법 개정의 근거로 거론했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자. 아시아가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해빙관계로 접어들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진척되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것을 “희생을 강요하는 도전적 시련”으로 보았다. 결국 유신개헌의 당위성을 강변하다 보니 전향적 국제정세마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찬양기사 시리즈 ‘축포’ 속에 탄생한 유신정권

조선일보는 유신선포 전후 그 어느 신문보다도 사설·보도·좌담·기고 등 여러 형식의 기사를 동원해 노골적인 유신찬양에 나섰다. 그 중에서도 11월 23일자에 실린 [새역사의 출범]이라는 사설은 유신개헌 지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설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나타냈다 ……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의 계단 위에 모든 것을 바친 그의 뜨거운 애국심과 뛰어난 영도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성원의 발현”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계단 위에 모든 것을 바친’ ‘뜨거운 애국심’ ‘뛰어난 영도력’ 등의 표현은 정부 기관지에서도 사용하기 민망한 표현이지만 조선일보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사실 서술 퍼런 계엄령 하에서 반대운동을 철저히 막아 놓은 채 진행된 투표에서 절대다수의 찬성표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역사적 문제의식과 사명감에 불타는 박 대통령의 영단에 의하여 태동된 10월유신은 이에 대한 전체 국민의 …… 압도적이고도 열렬한 지지·찬성에 의해 확고부동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도한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2년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전국 70.3%, 서울 57%라는 낮은 투표율 속에서 치러졌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대통령 선출권이 박탈되고, 야당 인사들의 참정권이 철저히 봉쇄된 채 친여 인사들 일색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어쩌면 당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은 12월23일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단독후보 박정희는 총 대의원 2천3백59명 중 2천3백57표의 찬성표를 얻어 99.9%의 지지율로 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투표 절차의 오류로 무효 처리된 2표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완전 1백%의 지지율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2월 23일, 24일, 28일 등 3일에 걸쳐 유신체제에 대한 확실한 지지와 충성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단독후보로 추천한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는 12월23일 [국민회의와 대통령 선거-영광스런 순간에 공감할 함께 한다]는 사설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에 합당한 후보인물을 추천하는 절차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인 12월 24일자 사설 [즐거워 통일에의 의지-8대 대통령 선출을 경하하면서]에서는 "이 역사적 전환기에 국민의 최고 영도자로서의 새로운 중책을 맡은 박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민족의 앞날에 힘찬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라고 적고 있다.

특히 12월 28일자 사설 [새역사의 전개-제8대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을 경하한다]는 미사여구가 총

동원된 유신 찬양문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부와 근대화의 씨앗을 뿌려 가끔으로써 이 나라 국민의 뼈에 젖은 패배의식과 열등감을 용기와 자신으로써 대체해 주고 지난 4반세기에 걸쳐 지속되어 온 냉전 속에서의 동족상잔과 남북결원의 민족사에 10·17 구국의 영단으로 종지부를 찍고 평화통일의 새역사를 위하여 정초한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취임토록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덥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조선일보는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박정희의 10·17 '쿠데타'를 도리어 '구국의 영단'이라고 추켜세운 것이다. 이 사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진다. "무엇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5·6·7대 대통령을 역임한 그를 또다시 환영하는 것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그의 영도력 때문이다. 그의 높은 사명감과 뛰어난 능력과 역사의식의 정당성 때문이다 …… 온갖 난경서 오늘의 굳건한 역사발전의 기틀을 구축한 그의 훌륭한 정치역량을 우리는 더욱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더욱 전망적인 민족통일의 사명감과 구국중흥의 신념에 불타는 탁월한 영도자를 가졌다." 유신시절의 조선일보 사설이 '위대한 수령' 운운하는 북한의 선전문에도 결코 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조선일보에게 정론직필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박정희를 그리며'에서 '박정희를 넘어서'로

합법적으로 철권통치의 칼자루를 쥔 박정희 정권은 이후 자신에게 도전하는 세력을 무력으로 탄압했다. 정치적 타협이나 대화보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권력을 지켜 왔다. 박정희가 집권하는 동안 각각 계엄령 3번, 위수령 3번, 긴급조치 9회가 발동되었다. 이 기간을 합산하면 자그마치 1백5개월이나 된다. 박정희 정권은 5·16 쿠데타에 따른 비상계엄으로부터 부마항쟁에 따른 위수령까지 초법적 방식을 통해 통치를 시작했고 마감했다. 총

집권기간인 2백20개월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간이 공포정치의 시대였던 것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의회민주주의는 부정되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아래로부터의 참여는 차단되었고 관료사회의 선의에 입각한 경쟁도 봉쇄됐다. 독재정치, 정경유착, 권언유착, 부정부패, 복지부동, 판치금융, 정보공작, 인권유린 등 우리 시대를 옥아뎀던 부정적 편린들이 뿌리를 내린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물론 박정희와 관련해 경제성장에 대한 찬반과 논란이 많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압살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을 외면한 채 박정희찬양에 열을 올리는 것은 역사에 대한 편향이며 기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유신개헌과 유신체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었다.

당시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선일보 지면에서 검열을 통해 기사가 삭제된 흔적을 찾기는 거의 어렵다. 오히려 당시 조선일보 지면에서는 절대 권력자의 의중을 알아서 미리 자기검열을 행한 한국언론의 굴종의 단면이 엿보인다.

"우리의 보다 진전된 내일은 과거지향적 '박정희 되살리기'가 아닌 미래지향적 '박정희 뛰어넘기'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조선일보의 '박정희 살리기'

유신찬양도 언론자유다?

18년간의 군사독재가 땅에 묻힌 지 꼭 18년만에 부활한 박정희 신드롬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언론은 단연 조선일보다. 물론 중앙일보도 비서실장의 회고록을 20회에 걸쳐 실었고 [실록 박정희 시대]를 장기간 연재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꾸준하고 계획적으로 박정희의 정치적 부활을 기도한 대표적 언론으로 꼽힌다.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조선일보는 자매지인 월간조선까지 동원해 박정희 살리기를 시도했다. 82년 이후

현재까지 월간조선은 박정희 관련 기사를 총 1백48건이나 실었다. 이는 1년에 7건 이상의 기사가 게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82년 이후에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관련 기사를 실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사를 보면 비서실장, 유족, 관료 등 박정희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의 신변잡기식 회고담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자기합리화와 변명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이양계획' '사우디 아라비아와 안보경협' '등소평과의 회담 추진' 등 일명 '미완성 프로젝트' 등을 별다른 검증없이 게재하여 선견지명과 추진력은 물론이고 청렴과 소탈함까지 갖춘 '영도자' 혹은 '혁명적 지식인'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박정희는 완벽한 인물이었는데 부하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책임전가가 뒤따른다. 마치 이승만은 괜찮았는데 이기붕이 문제였다는 식이다.

이들 기사가 회고에 그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구시대의 인물을 되살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특히 조선일보가 90년대 이후 박정희 관련 기사를 부쩍 많이 실는 것은 개혁과 민주화의 진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특히 박정희 전기까지 연재하고 있는 조갑제 기사는 98년 8월 5일발행된 뉴스피플에서 "권위주의 정권일망정 독재는 아니었다 …… 언론의 자유와 야당의 견제와 비판기능이 상당히 살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논법대로라면 3선개헌 유신개헌 찬양으로 얼룩진 조선일보의 보도도 '언론자유'에서 비롯된 셈인지도 모르겠다.

본질과 과정을 무시한 채 현상과 결과만을 중시하다 결국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21세기를 코앞에 두고도 화려했던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나 역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흐른다. 명암과 청탁을 안고도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처럼.

조선일보 기획모니터-5
98년 12월호 '말'지

조선일보가 경제전문회에 서야 하는 3가지 이유
**국가부도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 아니다” 강변**

@ IMF 구제금융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강변 @ 외환위기 전야에 “양심수 논쟁 벌이자” 정치선동 골몰 @ IMF 제협상 주장 - 내가 하면 ‘예국’, 남이 하면 ‘예국’

조선일보는 외환위기를 예측한 각종 보고서와 외신보도를 무시하거나 축소 왜곡한 반면 “외환 위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만 대대적으로 부각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이를 근거로 성급하게 “외환위기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까지 ‘단독으로’ 실시하여 외환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여론을 ‘앞장서서’ 주도한 조선일보는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이틀 전까지 “IMF 도움 없이 위기해결 가능(97년11월 20일)”하다고 되풀이 보도하여 당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1. 조선일보는 앞장서서 외환위기를 축소는폐했다.

IMF 사태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 없다” 되풀이 구제금융 요청 이후에는 태도를 돌변해 A나라

망신 타이밍도 놓쳐B, A경제 다 망쳐놓고...재경원 문책론도B(11월 22일)라며 정부를 가장 강도높게 비난한 것도 역시 조선일보였다. 결국 조선일보는 코앞에 닥친 외환위기를 예측진단하는 데 실패했을 뿐더러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을 왜곡해 놓고도 자신들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조선일보는 모든 책임을 정부와 국민에게 돌리는 데 급급했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이미 97년 초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1월 7일에는 현대그룹 산하 현대경제사 회연구원이 한국의 경제상황이 94년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르몽드는 1월 7일자 [멕시코에 이어 서울]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멕시코에 이어 한국은 지금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도 예고하고 있다”며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조선일보는 묵살하거나

왜곡하였다. 르몽드 보도의 경우는 한국경제가 닥칠 어려움을 예측, 경고한 것인데도 엉뚱하게 외국인론에 비친 ‘노동계 파업’이라는 타이틀로 보도하였다. 그러면서도 막상 조선일보가 인용한 르몽드 기사를 자세히 뜯어보면 노동계 파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국가경제가 결판날 처지에서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조선일보는 경제위기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단독 인터뷰, 단독 설문조사 등 ‘독자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97년 3월 8일과 9월 18일 각각 A “한국경제 위기아니다” (함영준 특파원),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강드쉬 IMF 총재 조선일보와 회견(강효상 기자)등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9월 11일자 “한국 외환위기 아니다” B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주한외국 금융기관장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외환위기 경고 외신보도에 “언론자유 넘어섰다” 비난

특히 조선일보가 9월 11일자에서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는 외환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억지 해석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일례로 “한국의 현 상황을 외환위기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즉 “현재 상태를 ‘위기’라

는 표현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문제 있는 개별 금융기관의 외환위기라는 표현이 적절하며 멕시코와 같은 외환위기는 한국에서 일어나기 힘들다” 등의 완곡한 표현의 답변을 곧바로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해석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 보도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더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외면한 채 “한국경제, 대기업 부

도 견딜 수 있다”는 낙관 일변도식 전망은 오히려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외환위기를 축소·은폐한 기사는 계속됐다. 97년 8월 21일자 A불안하지만 위기상황 아니다“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외환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나 ‘외환위기’라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심각한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에도 1면 톱으로 “한국 성장률 더 높아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한편 당시 외국인론들은 국내 언론의 보도와 달리 한국의 외환위기를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11월 3일자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긴급기사’로 전세계에 타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1월 8일 이들 외국언론의 보도가 “근거 없는 추측보도”라는 정부 입장을

**400억대 규모, 외환위기에 대비한 100억대 규모의
국가부도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 아니다” 강변**

조

외환위기 전야에 “양심수 논쟁 벌이자” 골몰

조선일보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강변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강변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강변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강변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강변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강변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대변한 [외국언론 “한국경제 비판” 정부 “왜곡이다” 강력대응]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11월 10일자 사설 A외국의 ‘한국경제 때리기’ B에서도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실체를 다소 과장되게 비판적으로 보도 또는 전망한다든지 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와 경제의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정부의 우려는 현재 사태의 민감성에 비추어 충분히 근거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라며 외환위기를 은폐하려는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빴다. 더 나아가 “근거도 없이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거나 불확실한 외채 통계를 함부로 인용하거나 한국의 은행들이 금방이라도 연쇄파산할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물론 대다수 한국언론 또한 눈앞에 다가온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니터 결과 그 정도가 가장 심했던 신문은 바로 조선일보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외신에 대한 당시 정부여당의 ‘불만’을 가장 충실하게 대변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경제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2. 조선일보는 외환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국가부도 전야에 “사상논쟁 벌이자” 분열 선동
조선일보는 98년 9월 16일부터 [본사가 정한 국가적 아젠다-한국경제 회생의 길]이라는 거창한 기획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게재된 [정경보다 경제다]에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은 “경제회복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정치를 포함한 모든 쟁점들은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설 때까지 경제를 위해 자리를 비켜 주어야 한다.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대립과 갈등을 동결하는 선언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틀 뒤 최청림 편집부국장 역시 “민심은 경제다”라는 칼럼에서 “사정이 대로를 확보하면 경제회생이 골목으로 밀려난다”며 ‘경제 우선’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겨져 있다. 우선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척결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결국 조선일보가 정한 ‘국가적 아젠다’ 속의 경제회생 주장은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시 정치권 사정정국에서 열세에 놓인 한나라당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작년 이맘때의 조선일보 보도가 잘 말해 준다. 다시 한번 1년 전의 조선일보를 펼쳐 보자. 조선일보는 97년 11월 1일 [DJ “집권하면 양심수 사면”]이라는 다소 ‘영동한’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대문짝만하게’ 올렸다. 이 날부터 조선일보는 ‘양심수 논쟁’을 주도하며 대선정국을 공안 분위기로 몰아갔다. 특히 11월 6일자 사설 ‘양심수’ 재론에서 “양심수 논란에 온 국민이 참여해서 끝까지 논쟁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양심수 논란이 대선정국에서 당시 여당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정쟁거리라는 점을 조선일보는 놓치지 않은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보다 ‘대통령 만들기’가 우선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 당시는 외환위기가 닥치느냐 마느냐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시기였다. 97년 11월 초순은 해태그룹과 뉴코아그룹이 화의신청을 하는 등 외신에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한 주간지에서 절박했던 11월 초 당시를 ‘피를 말리는 상황’으로 표현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가적 위기상황은 외면한 채 정쟁에

불을 지피고 그 싸움에 몰두했던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는 ‘경제문제’보다 ‘사상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정작 11월 2일 나온 이회창 후보의 양심수 사면 발언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켰을까.)

국가부도 사태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이 기피하는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 경제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을 부추겼던 조선일보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정치보다 경제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율배반이다. 동시에 그것은 부패 정치인을 척결하자는 사정에 반대를 표명한 셈이다. 결국 조선일보가 지지하는 정당이 불리해지자 경제위기니, 정쟁이니 운운하며 국면을 전환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조선일보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위기쯤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독자와 국민들이 조선일보의 의도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조선일보는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IMF 재협상론—남이 하면 ‘매국’, 내가 하면 애국’

조선일보의 오만함과 말 바꾸기는 IMF 재협상에 대한 보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97년 12월 7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이 인제 후보가 재협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지면을 대대적으로 할애하여 연일 비판했다. 또한 12월 9일과 11일에는 각각 [재협상의 위험성], [불신 심화시킨 재협상론]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특히 12월 11일자 사설에서는 “한 야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이 재협상론은 IMF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실행하지 않을지도 모

른다는 우려에 빠지게 했는데 이런 우려감은 김대중씨가 IMF 조건들을 하나하나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더욱 증폭되고 있다(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는 것이 외국의 일반적 시각이다”라고 단정했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정치적 목적이나 근시안적 단선논리 때문에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주장은 작금의 심각한 경제현실의 개선에 장애가 될 뿐”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영동하게 김대중씨의 재협상 발언에 떠넘긴 꼴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최청림 칼럼에서도 “재협상 운운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재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조선일보가 먼저다. 97년 12월 2일자 사설 AIMF라는 한파B에서 조선일보는 “은행유자에 대한 통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는 결과를 빚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와 IMF측과의 추후협상이 요구되는 대목이다”라며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어 12월 3일자 사설 [쓰다고 다 좋은 약 아니다]에서도 “과도한 긴축이나 저성장, 고이율 정책은 비록 그것이 IMF 정책의 단골메뉴라 해도 우리에게 너무 경쟁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재협상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던 조선일보가 김대중 후보의 재협상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율배반이다. 그리고 대선직후 조선일보는 다시 입장을 바꾸어 IMF 요구사항을 [즉각 실천해야 산다](97년 12월 24일 김대중 칼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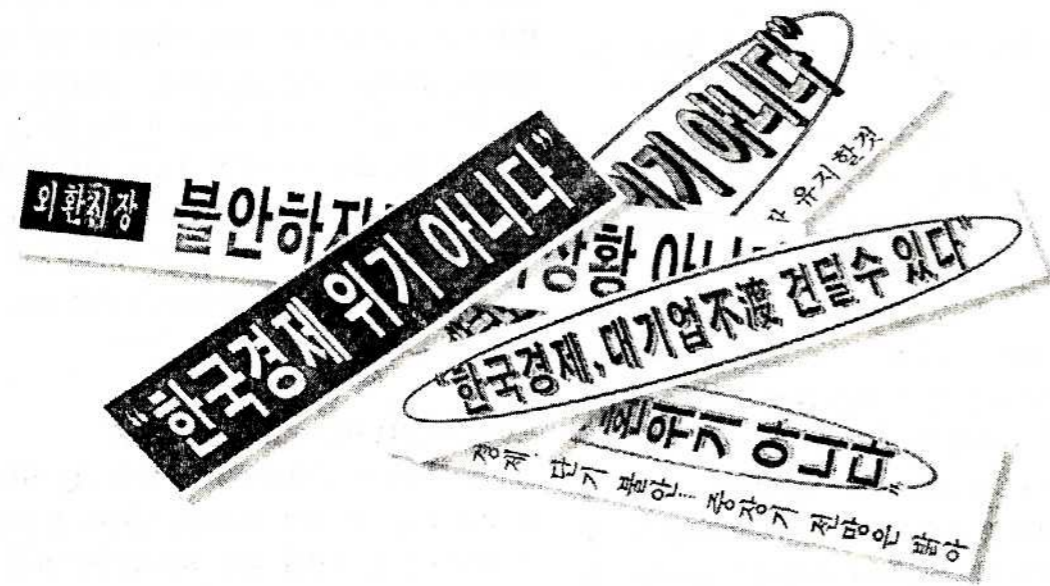
국민을 바보로 여긴 조선일보의 오만

그러나 또다시 조선일보는 말 바꾸기를 시도했다. IMF의 권고를 즉각 실천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더니 올 초부터 해외 기고자들의 ‘한국 처

방 재검토' 등의 주장을 실으며 입장을 전환한 것이다. 98년 1월 18일자 [너무 가혹한 빚쟁이]에서 조선일보는 "남의 위기를 빌미로 폭리를 노린다는 국제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채상환 연장 협상은 순리에 맞게 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한국 외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온건하게 조정되었으면 한다" 고 했다.

3월 6일 변용식 편집부국장은 칼럼 [양약이라는데...]에서 "어느 나라에도 한국이 받아든 것과 같은 고통스런 IMF 프로그램은 없었다" 며 "IMF가 너무 쓴약을 많이 먹여 한국과 동남아 경제가 까무라치는 결과가 울지 모른다" 고 주장했다. 평범한 독자들이 조선일보의 표변하는 논리에 혼란스러워했을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재협상을 주장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주장하면 안 되는가? 물론

조선일보는 내심 자신들이 지목한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말 바꾸기야 할 수도 있는 것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과 독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청맹과니이거나 바보로 여기는 오만한 자세가 아닐수 없다. 어쩌면 이것이 조선일보를 경제청문회에 세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집중분석>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 곡필과 오보 10선

조선일보 왜곡보도 국경도 없다.

조선일보는 외신기사를 보도하면서 객관적인 '인용'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활용'한다. 원문의 뜻을 전혀 엉뚱하게 인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원문에 엇는 말을 '작문'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외신 왜곡보도사례를 살펴본다.

1. 김대중 주필의 엉뚱한 오역, 영어실력 탓?

-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용 (97년 12월 24일자) -

지난 97년 12월 24일자 조선일보 1,2면에는 "긴급제언 [즉각 실천해야 산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필자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그는 이 글에서 "우리에게 돈을 꾸어 줄 입장에 있는 외국 특히 미국의 언론논조를 종합해보면 그들이 여전히 돈주머니를 열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주필은 그 첫 번째 이유를 제공한 당사자로 김대중 당선자를 지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미국의 언론들은 김대중 당선자를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12월 22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은 김당선자를 가리켜 '인기주의자(populist)' '예측하기 어려운 (unpredictable)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경제정책을 [근거없는 (unfounded)]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그의 측근들을 [인기위주의 국회의원과 좌파성향의 학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월가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이 신문의 이런 성격 규정은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김 당선자와 그의 정부 그리고 한국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2월 22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과 김 주필의 칼럼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됐다. 김주필이 '악의적인 오역'과 '맥락을 무시한 특정 단어 부각'등의 방법을 동원해 월 스트리트 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확인된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판지일보』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므로 여기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김 주필은 칼럼 후반 부에서 "월가가 그(김대중 대통령)를 '말을 잘 뒤집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따옴표로 표시하여 인용한 것임을 밝혔지만 원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말을 잘 뒤집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없었다. 추측컨대 김주필은 'unpredictable'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맥에 따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왜곡의 문제는 발생한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만 부각한 것도 문맥을 살

리지 못한 인용인데 그 단어를 다시 확대해석한 것은 거듭 왜곡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unfounded'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다. 이 단어가 쓰인 부분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기반이 약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Mr.Kim's economic policy, to be sure, may prove to be unfounded)"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금시장의 혼란과 한국 주요기업들의 연속되는 도산 때문에 IMF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대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He is under enormous pressure to please investors and the IMF because of the chao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the continuing bankruptcies of major Korean companies.)"라는 문장이 이어진다. 바로 뒷 문장이 '기반이 취약한(unfounded)'이라는 앞 단어의 객관적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김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근

조선일보 왜곡 보도 국경도 없다

조선일보는 외신기사를 보도하면서 객관적인 인용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의적으로 '결정'한다. 원문의 뜻을 전혀 왜곡하지 인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문맥에 없는 말을 '직접' 첨가도 한다. 대표적인 외신 왜곡 보도사례를 살펴본다

이주언·윤영호·김민환·신용현·최재홍

1 월 스트리트 저널 기사 인용 97년 2월 24일자 김대중 주필의 영동한 오역, 영어실력?

조선일보 97년 2월 24일자 2면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말을 잘 뒤집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없었다. 추측컨대 김주필은 'unpredictable'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맥에 따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왜곡의 문제는 발생한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만 부각한 것도 문맥을 살리지 못한 인용인데 그 단어를 다시 확대해석한 것은 거듭 왜곡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97년 2월 24일자 조선일보 2면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말을 잘 뒤집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없었다. 추측컨대 김주필은 'unpredictable'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맥에 따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왜곡의 문제는 발생한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만 부각한 것도 문맥을 살리지 못한 인용인데 그 단어를 다시 확대해석한 것은 거듭 왜곡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거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may'를 무시한 채 '근거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다. 기자회견보 9월 28일자에 따르면 『조선일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주필이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한 것 같다"며 AWSJ 22일자 관련 기사를 제시했다』고 해명하면서 관련 기사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직접 검토해 본 결과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와 내용상 차이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김 주필 칼럼에서 "미국의 언론들은...

은...미국 월가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이 신문"이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가. 따라서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김 주필은 칼럼초반에서 "미국의 언론들은 김대중 당선자를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지는 12월 21일자 사설에서 "그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이 됐지만 작금의 위기는 그가 한국의 예비지도자들중 가장 잘 준비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기회"가 될 것이다"(Now he has won the prize at a most difficult time but the crisis is one for which he may be best prepared of Korea's potential leaders)라며 김 당선자를 높이 평가했다. 뉴욕타임즈 역시 19일자 사설에서 "구제금융조건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전적으로 그른 것이 아니다. 이번 선

거는 IMF가 잘못된 결정(mistake)들이 해악을 끼치기 전에 이를 바로잡는 기회다. (His criticism of the bailout terms, however, is not wholly wrong. The election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fund to correct its mistakes before they do harm)"라고 주장해 당시 김대중 당선자의 재협상 발언과 관련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언론을 '미국언론'으로 일반화한 김 주필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2. "못 믿겠다"를 "조선일보 대서특필"로 자랑 - 황장엽 논문 외신 관련 보도(97년 4월 25일)

조선일보는 북한 관련보도에서 종종 특종을 낸다. 그러나 나중에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기사가 오보와 왜곡임이 밝혀졌다. 때로는 오보나 왜곡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 외신에서까지 그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외신의 비판적 문제 제기마저 뒤집어 마치 외신에서 조선일보의 특종을 크게 보도한 것처럼 또다시 왜곡하는 적반하장식 용기를 발휘했다. 황장엽 논문 관련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

조선일보는 97년 4월 22일자 1면에 황장엽씨 논문을 인용하여 "북 핵-화학-로켓무기로 남한 초토화 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머리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이어 4월 25자 2면에 박스기사로 <각국언론들 '황장엽 논문' 보도/모두 조선일보 인용...核-日공격 계획등 언급>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제목으로 보면 마치 외국언론이 황장엽 논문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기정사실화해 비중있게 인용보도한 것처럼 보인다. 기사의 시작도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의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세계 주요언론들이 조선일보를 일제히 인용,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논문 『조선문제』를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사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해진다. 조선일보 스스로 "그러나 황씨의 발언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밝힌 뒤에 워싱턴 포스트지와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예로 들었다.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보도를 인용했다고 한 세 신문의 기사를 실제로 모니터팀이 확인해 본 결과 황장엽 논문의 신빙성과 이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일보는 솔직하게 외신들이 '유보적인 자세'를 보인것인 아니라 '믿지 못했다'고 기술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보도에는 조선일보 기사와는 달리 "조선일보에 의하면"이라는 인용구가 전혀 없다. 'Chosunilbo'는 커녕 'The Newspaper'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다만 첫 문단에서 "남한의 안기부가 어제 밝혔다"(South Korea's intelligence agency said yesterday)라고만 돼 있다. 도리어 이 신문은 4월 23일자에서 "황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Experts cautioned that Hwang had offered no proof of what he asserted ...)"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신문은 "나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I wouldn't take it as gospel)"와 "황씨가 그런류의 정보를 얻을 위치에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서방 특파원의 발언은 인용 보도했다.

같은 날 뉴욕타임즈도 비슷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 신문은 "한국전문가들은 그것을 해석하는데 신중할 것을 충고했다. 그들은 논문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고 논문의 작성배경이나 환경 또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But experts on Korea advised caution in interpreting it. They said that the essay was short on details and that very little was known about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it was

written)고 보도했다. 또 "북한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기술한 장문의 논문에서 (북한군의) 무기(군사력)에 대한 언급은 단지 두서너 문장에 불과하다 (And the remarks about the weapons constituted just a couple of sentences in a long essay about the overall situation in North Korea)"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 지적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는 논문을 인용하면서 특정 부분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한 셈이 된다.

한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는 조선일보와 안기부의 컨택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바로 "조선일보는 남한의 안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논문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The newspaper, which is known to have close contacts with South Korean intelligence did not say how it obtained the essay) "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일부 관계자들은 황장엽씨가 과연 보안이 철저한 군사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스러워하고 있다.(some wondered if he was privy to the most secret military matters in Pyongyang)"면서 "조선일보는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황씨의 망명이 북한에 의해 꾸며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조선일보가 예로 든 외국 언론 모두 황씨 논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논문 입수경위와 안기부와 의 컨택션에 강한 의혹을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시치미를 뚝 떼며 "모두 조선일보 인용"이라고 자랑한 것이다. 과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왜 자신들의 보도를 비판한 의신을 이렇게 거꾸로 보도했을까. 결국 기사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제목을 다는 방법으로 독자를 기만하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3. '악의적 왜곡'에 '작문'까지

조선일보는 지난 2월 12일, 『민노총 '총파업선언' 외국언론 반응 - "한국 또다시 시험대 올라"』라는 기사에서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외국언론의 기사를 인용보도했다. 이 중 월 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인용한 부분을 보자. 조선일보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민노총의 14일 총파업 요구와 관련, 「개혁을 향한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준다」 며... "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2월 11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에는 "(노사정위원회의 협상갈등과 정치권의 재협상 거부로 조성된) 이러한 대치국면은 개혁을 향한 한국의 행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보여주었다(The confrontation showed how precarious Korea's steps toward reform still are)"고 되어 있다. 조선일보가 '총파업이 개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부분이 월 스트리트의 원문에는 '노사정 대치국면으로 개혁행보가 조심스럽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일보는 원문에 없는 내용도 인용하는 '초월적 독해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월 스트리트 저널이 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계와 기존 유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뒤이어 ② "과거 노동계가 노동관련 개혁을 무산시킨 일이 있지만, 현재 경제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필연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 ②의 내용은 ①의 내용 뒤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기사 원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결국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왜곡이자 작문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 달의 최악사실

[말지 연중기획]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언론이야말로 우리 시대 최후의 성역이라 할 것이다. 이 무소불위의 언론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본지는 그 첫걸음으로 이번 호부터 민언협 모니터위원회 신문분과와 함께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격려하는 글을 실는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언론개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언협 모니터위원회 신문분과

"언론개혁, 우리 손 안에 있지요"

이번호부터 '최악의 사실' 과 '이 달의 기자' 를 선정하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모니터위원회 신문분과(팀장 정희중)는 91년 민언협이 생산자운동에서 수용자운동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과정에서 태동했다. 민언협 언론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한 신문모니터팀은 지난 7년 동안 눈부신 활약을 통해 현재는 선거보도 감시연대회의(선감연)의 중추가 됐을 만큼 언론수용자운동의 대표적인 모임으로 성장했다.

현재 주로 회사원, 주부, 학생 등 15명으로 구성된 신문모니터팀의 활동방식은 회원 1~2명이 한 개의 신문을 맡아 이슈별로 꼼꼼하게 모니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매주 수요일) 모여 각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진지한 토론을 벌인다. 그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된 뒤 각 언론사와 관련 단체로 발송된다. "왜곡되고 편향된 언론의 태도를 공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 팀장 정희중씨의 말이다.

선거 시기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신문모니터팀은 더욱 바빠진다. 그런 때일수록 보수언론의 편파 왜곡보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92년 대선을 비롯한 지방선거, 총선 등 그 동안의 각종 선거 시기에는 불공정한 보도를 감시했으며 복핵 사태, 노동법 파동 등이 발생했을 때는 왜곡보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얼마 전에 끝난 97년 대선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회원들의 생활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김은주씨는 "신문을 꼼꼼히 읽다

보니 사회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비판적인 안목도 얻게 되었다"면서 "살림과 육아로 자칫 정체되기 쉬운데 일주일에 한 번 회원들과 만나고 나면 항상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매일 아침 진실을 말하는 신문다운 신문을 받아 보는 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감시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의악 최악이다

98년 1월호
중앙일보 97년 12월 1일자
[언론을 선거정략에 이용 말라]

위험 수위에 도달한 언론의 권위주의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 모니터위원회 신문분과는 최악의 사실로 중앙일보 97년 12월 1일자 [언론을 선거정략에 이용 말라]를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중앙일보가 [이회창 경선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문건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에 대한 해명보다는 언론의 힘을 내세워 국민신당은 물론 진상규명을 원하는 독자들의 바람을 음해'와 '협박' 등으로 왜곡했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일보가 이 사실을 통해 언론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앙일보는 문건과 관련한 국민신당과 국민회의의 의혹 제기를 음해와 협박으로 규정,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에 대한 이와 같은 의혹 제기가 국민신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동안 매체 비평 주간지 '미디어 오늘'이나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신문모니터팀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지적은 계속되어왔다.

'미디어 오늘' 97년 12월 10일자에 따르면 이 '문건' 이 다른 정보보고와 다른 점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 문건은 정보보고 라인이 아닌 일반기사 라인을 통해 송고됐다. 두 번째는 정보보고를 하는 입력자의 이름이 단순히 '정치부' 라고만 표기돼 있다. 마지막으로 통상 수요일이 정보보고 마감일임에도 다음 날 또다시 정보보고가 이루어졌다. 또

한 중앙일보가 국민신당에 대한 청와대 지원설과 관련하여 연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1면 머릿기사로 크게 다루었던 점도 이러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대선상황이 급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치관이라고 하지만 언론까지 선거정략에 끌어넣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한 이 사실의 내용은 단순히 국민신당에 대한 '경고'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경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연상케 하거니와 언론사의 권위주의가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중앙일보는 이 사실의 초반부에서부터 매우 극단적이고 권위적인 표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취재자료를 트집잡아'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 '다수인원이 신문사 앞에 몰려와 소란을 부리는 행위'

'언론에 대해 협박하자는 것인가'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이 사실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음해' 와 '협박' 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행동이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위를 두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라고 하는 등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시위의 자유마저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해명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가 뉴스를 취재하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배경과 분위기를 파악해 데스크에 보고하는 것은 일상적 업무에 속한다" 고 하여 별 설득력 없는 해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두 정당이 문제삼은 중앙일보의 취재자료 역시 일상적인 기자의 업무수행이었음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짐작된다" 고 하여 의혹 제기가 단순히 정치권의 정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평가절하하고 있다.

물론 '중앙일보 문건사건' 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는 않으며 대다수 국민들도 이를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특정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금지된 우리 사회에서 중앙일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지지 논조를 보인 것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태도라는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사실을 통해 의혹에 대한 쟁기를 막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98년 2월호 '말'지
문화일보 1월 8일자
[노조도 경제난 극복에 협력을]

노동자 희생 강요와 재벌 옹호 급급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신문모니터팀은 지난달의 최악사실로 문화일보 1월 8일자 <노조도 경제난 극복에 협력을>을 선정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을 사실 등을 통해 내보냈고 이중 일부 신문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재벌신문인 문화일보를 비롯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이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최악사실 선정에 적잖은 설전이 오고갔으나 결국 위의 사실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문화일보가 1월 3일자 <정리해고제 서둘러야>를 비롯해 사실 제목에서부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IMF협상 이

행과 관련, 재벌과 노동계에 대한 잦은 지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1월 6일자 사설 <대기업 정책 현실과 조화를>을 실었고 최악사설로 선정된 <노조도 경제난 극복에 협력을>에서는 노조의 행동이 마치 경제난 극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설 중 제목과 더불어 그 내용에서도 가장 편파적인 <노조도 경제난 극복에 협력을>이 선정된 것이다.

이 사실은 “경제개혁의 핵심주체로 설정하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노동계의 불참위협에 부닥쳤다”고 시작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가 금융권 정리해고제를 이유로 불참위협을 할 것이 아니라...”라고 쓰는 등 노동계의 불참을 ‘위협’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어휘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정리해고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노동계의 입장표명을 ‘위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노동계의 의도를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사실은 또한 1년 전의 총파업 상황과 달리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감독 하”에 있는 지금, 노동계가 “스스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리해고제가 노동계가 불가피하게 담당해야 할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리해고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제가 시행되지 않아 경제위기가 가중된다거나 심지어 정리해고제가 경제위기 극복의 필수조건이라는 해석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물론 이 사실은 노동계의 참여확보를 위한 보장장치로서 “실업보험기금의 확충과 직업재훈련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곧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을 조건으로 노동계가 노·사·정 위원회가 불참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결국 노동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실업의 여파로 온갖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 경제위기의 주범은 노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참여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경제난의 극복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는 문화일보의 주장은 재벌문제를 감추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다.

이 사실은 마지막 문장을 통해 “특히 노총과 민노총 지도부는 서로간의 주도권 다툼이나 여타 노동계 내부적인 문제로 국민적 합의도출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있다. 이처럼 마치 노동계가 이권다툼을 하고 경제위기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현재 드러나지 않은 노·노 갈등을 언급하는 것은 비열한 보도태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일보가 재벌옹호를 위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사실에 앞서 1월 7일자 <노·사·정 위원회 잘 이끌라>에서도 문화일보는 “정리해고제 조기시행문제를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도입 시행치 않을 수 없는 최대현안이다”라고 강도 높게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문화일보는 대기업의 구조조정문제와 관련 1월 6일자의 <대기업 정책 현실과 조화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그러나 그들의 요구와 우리의 경제현실을 조화시키고 균형을 맞추는 조정노력은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정리해고제와 관련 IMF합의사항 무조건 이행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논조는 이 사실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 하여 줄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한국경제의 수용능력범위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 추진 되도록...”이라든가, 정경유착과 상호지급보증 축소와 관련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 전후배경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관찰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주장 등이 그렇다.

최근 우리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누적에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정경유착에 기반한 문어발식 다각화 경영 등 주로 재벌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대책이나 재벌과 정치권의 뼈를 깎는 고통 분담 없이 정리해고를 실행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여러 가지 범죄와 자살 등 사회문제를 양산하여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언론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IMF 이행 조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리해고제 도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과 실업대책 마련 등을 원하는 다수국민의 입장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98년 3월호 '말'지
중앙일보 2월 7일자
[대타협 이후 남는 문제들]

재벌개혁 외면한 채 '노동자 목격기' 선동

민언협 신문모니터팀은 최악의 사실로 중앙일보 2월 7일자 사설 [대타협 이후 남는 문제들]을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그간 재벌의 이익 옹호에 앞장서 왔던 중앙일보가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한 노동계의 고통을 폄하하고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수호, 대타협의 의미를 퇴색시켰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노사정위원회 타결에 대해 “한국 노동사에 획기적 전환점” “짧은 기간에 해묵은 노사간 쟁점에 대해 대타협을 이룬 것은 놀라운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곧 "합의 내용 중엔 현실적 우려를 자아내는 과제도 있고, 합의과정에서 서로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해 현실적 문제를 도외시킨 측면도 있다. 또한 보완 수정해야 할 대목도 눈에 띈다" 며 전교조 합법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의 정치참여 인정 등 노동자들이 최소한으로 확보한 몫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익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자 목죄기' 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사실은 "전교조 문제는 노사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 학교교육의 문제" 라며 "교육현장의 새 불씨" 라고 단정하거나 "이번에 노동관계법이 대폭 바뀌고 노조를 숙박했던 여러 금제(禁制)가 풀리게 되면서 산업현장 나아가 공직사회, 학교, 정계에서 노동세력이 세 걸집을 하고 새로운 마찰을 부를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안겨 줄 수 있다" 는 등의 논리로 단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는 기득권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사는 스승이자 노동자다. 아울러 민주사회라면 노동기본권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기업장마다 정치쟁점에 휘말려 근로자의 복지후생은 뒷전이 되는 것은 아닌가...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치되고 교원의 노동조합이 허용될 경우 이들의 이익집단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 노조를 '이익집단' 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마저 부정하는 태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 사실은 재벌의 이익 옹호에 급급하다 보니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한다. 앞서 2월 3일자 '고용조정 이제 결론 낼 때'라는 사실에서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백만명의 실업자 중.....고용조정(정리해고)으로 인한 실업자는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7만~8만여 명에 이르리라는 전망이다" 라며 현실을 축소하려 했던 중앙일보는 이 사실에서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경우 현실적 해고 대상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바르게 알려 줘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노동자들이 잘못 알고 반대하니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삼성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 1백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양산돼 실업자는 1백50만~2백만명 수준이며 그 가족까지 따지면 4백만~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정리해고가 마구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서 해고기준이 완화된 합의내용은 위기극복을 위해 노동계가 제살 깎는 아픔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실은 "실업, 고용기금이 확충됐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세 작업장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돼 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 고 주장해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조는 실업급여가 끝난 뒤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없는 중장년층의 장기 실업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저성장 고실업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총체적 검토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때다. 그럼에도 이 사실이 강조하는 "화합과 양보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넘는다" 였던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의 득세를 위한 법개정일 수도 없다" 며 노동자들의 결단과 희생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심지어 "노조의 정치세력화나 막강한 힘의 행사는 선진국에서 이미 지난날의 행태... 법개정 과정에서 이런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보완 수정돼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참다운 대타협이 될 수 있다" 라며 합의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사회의 각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협약기구의 구성에 대한 가능성을 갖게 하는 만큼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이번 합의에서 노동자들은 무거운 짐을 진 반면 재벌개혁의 내용은 미비하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언론이 재벌과 정치권의 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노동자들이 얻게 된 최소한의 권익마저 부정하는 보도 태도를 보이는 것은 권력과 밀착된 보수적인 언론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98년 4월호 '말'지
조선일보 2월 19일자
[미전향 간첩]과 국가체통]

아직도 냉전논리에서 못 벗어난 조선일보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경제난국 해결을 내세우면서 시장경제 쪽에 무게를 실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단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양심수 사면문제라는 지적이다.

당선 직후 만난 김영삼 전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는 대화합과 단결을 내세우며 전격적으로 전 노씨 사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대화합을 위해 당연히 양심수 사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되기까지 했는데도 김 당선자는 양심수 사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대선 때 양심수 관련 발언이 보수적인 신문들에 의해 난타당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결국 김 당선자의 화해는 우편향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우편향적인 기류는 경제문제와 함께 보수적인 신문들의 뒷받침과 선도(?)로 새 정부의 기초가 되었다. 시장경제만 남고 민주주의는 뒷전으로 처지고 만 것이다.

민가협 관계자들의 지적처럼 신문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보수언론의 우편향은 극에 달했다. 심지어 '양심수 사면'도 그들에 의해 '국가모독죄'로 몰릴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일보는 2월 19일자 [미전향 간첩]과 국가체통]이란 사실에서 미전향 장기수 사면을 '국가 체통의 모독'이며 '국가권위의 자진 반납'이라고까지 비난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이데올로기나 특정 계층의 이해에 우선한다는 믿음과 이 사실이 이러한 인류 보편적 믿음을 왜곡시키고 격하시켰다는 것이 이번 선정의 첫 번째 이유다. 더 나아가 이 사실은 카테고리가 엄연히 다른, 인권과 국가 체통이나 체면의 문제를 동일 범주에 넣어 평하는 오류를 범하기까지 했다. 인권에 기초한 인도주의는 어떠한 사상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은 국시논쟁이나 수차례 재연된 사상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발붙일 수 없는 이단논리인 것처럼 낙인찍혀 버렸다.

조선일보는 또한 '전향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사실은 "통치행위의 합당한 형식에서도 국가의 정당성과 권위가 나온다"고 전제한 뒤 "사면(국가의 통치행위)을 할 때도 그에 합당한 형식이 갖춰져야 국가의 명분과 체면이 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형식으로 수형 자세의 모범 판정과 전향서 작성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 신문은 "만일 합당한 형식(특히 전향서 작성)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단행된 통치행위(사면)"는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성 지적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협박(?)은 "김영삼 정부의 실패는 바로 '이인모'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

전향서 작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인간은 법 이론을 넘어 내면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면의 자유가 외부 사회질서를 침해할 때이다. 미전향 장기수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수십 년간 옥살이를 해 온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상범이다. 그들을 풀어 주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논리 이전에 정치논리에 기초한 것이며, 정치논리이기 이전에 인권논리에 의한 것이다. 풀어 주는 마당에 그들에게 전향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내면침해다.

조선일보는 또한 지나친 감정개입을 노출했다. 이 사실은 양심수 사면 문제에 대해 지나치다 할 만큼 흥분하고 있다. '국가체통'이니, '정부 실패'니 '김영삼 정부의 실패는 바로 이인모' 운운하면서 논조를 극단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백절불굴의 공산혁명가'들의 '승리' 앞에서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당하는 분노..." 운운하는 구절을 읽으면 섬뜩해지기까지 한다.

그리고 미전향 장기수의 석방을 '국가적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분노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혹자는 이에 대해 '냉전논리에 존립근거를 둔 보수신문의 그에 대한 그리움의 발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

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이 설마 그 지경에 이르렀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은 대통령 전권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특사는, 일정한 제한조건이 따르는 가석방이나 감형, 그리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전권 행사가 가능한 사안이다. 전권사항에 대해 수형의 모범도라느니 '전향서 작성'이라느니 하며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것은 또 다른 대통령 발목 잡기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수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색깔론 시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전향 장기수 사면 문제가 또다시 대통령 사상시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김대중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언론을 잡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문민정부 개혁 실패의 최대 공로자(?) 중의 하나가 보수언론이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

새 정부 들어 대부분의 신문들은 보수적인 논조를 펴고 있다. 신문에 놀린 것인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새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보수언론이다. 이번 조선일보의 양심수 사면 관련 사실을 '새 정부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보수언론의 의도'의 한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98년 5월호 '말'지

중앙일보 4월 2일자

[북풍, 이대로 덮고 갈건가 - 문창극 논설위원 칼럼]

북풍주범 옹호하고 반복의식 조장한 중앙일보

안기부에 의한 북풍공작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신문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논조는 여타 신문과 다소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

두 신문은 안기부에 의한 공작정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사건에 어느 정치인이 관여했는지 등 흥미위주의 보도에 치중하거나 경제위기를 내세우며 이번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지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두 신문은 또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